

##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인쇄/1997년 9월 3일

발행/1997년 9월 8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정세현

편집인/통일환경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7 팩시밀리 901-2543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737-7498

---

ISBN 89-87509-05-2

5,000원

연구보고서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민족통일연구원

# 요 약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관여하려 할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 통일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통일한국과의 관계 설정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정세의 핵심적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역학관계 변화에의 적응 또는 주도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점진적·단계적 통일시와 급변사태 발생시로 대별하여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 1.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일반적으로 말하여 주변국들은 남북대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일반적인 소극적·부정적 입장과 달리 구소련의 신사고 외교정책이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최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듯이 러시아가 남북대화과정과 통일과정의 진전상황에 따라 여타 주변국가들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원·유도함으로써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아태정책의 전반적 애로를 타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동북아 역내 역학관계에 있어서 열세에 있는 러시아의 경우, 통일한국의 강대국화에 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

다. 셋째, 한반도의 통일여건이 성숙하여 그것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면,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통일한국과의 우호적인 유대관계를 미리부터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다. 넷째,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 2. 점진적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첫째, 러시아는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할 수 있다. 즉 러시아가 북한의 외교고립·경제난 탈피를 위한 대외관계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역할을 용인하는 바탕위에서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을 촉구하고 미·북간 접근을 적극 지원·중재할 수 있는 틈새를 파고드는 등 적극적인 중재역을 자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북한의 국제사회에의 편입을 적극 유도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협조할 수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주변4국 또는 유엔의 국제적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며, 러시아군이 한반도 평화유지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한반도의 전쟁상태가 종료되고 평화상태가 정착되면, 당연히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유엔사 해체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소련군의 북한 철수를 강조하는 등 원칙적 입장에서 철수를 주장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주한미군이 한·미간의 쌍무관계에 입각한 것으로서 휴전협정 종폐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인정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는 남북대화의 중재역할을 자임할 수 있다. 작게는 남

북문화·학술행사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중재의 범위와 내용이 다양할 수 있다. 특히 경제·군사분야에서의 남북대화도 중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남북대화의 직접 중재 뿐만 아니라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한 남북대화 중재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대화 중재정책들이 설령 실효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러시아가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안·중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쌍방에 대해 공히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만으로도 러시아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러시아는 남북경협을 중재할 수 있다. 러시아는 남북한과의 동시수교국으로서 극동시베리아를 매개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러시아를 매개로 한 남북경협은 한국의 자본·기술, 러시아의 자원, 북한의 노동력을 이상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며, 북한의 경제개방·개혁을 유도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이 실행단계로 들어갈 경우에는 3각협력이 매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는 한반도 군비통제를 중재·유도할 수 있다. 러시아는 남북한 쌍방과 공히 군사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군사문제와 관련한 한반도문제 처리과정에 여타 주변국과 구별되는 지위를 요구할 것이다. 즉 러시아는 한반도 군사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주장할 것이며, 특히 한반도 군비통제와 관련,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군사훈련에 남북한의 참관단을 초청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반도 군비통제과정에서 러시아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미국의 입지를 고려할 때, 크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남북한 군비통제과정의 공정한 중재자

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다. 이리하여 남북한 특히 북한측이 이에 대해 공감하게 될 경우, 남북한과 공히 군사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의 중재역할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미·북간 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구도가 깨지거나 특별사찰문제가 거론되어 북한이 특별사찰을 거부할 경우, 러시아는 변화된 상황 속에서 다자주의적 접근을 재차 강조하거나 가능하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역할을 자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러시아는 통일협상을 중재할 수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적극 관여하고 통일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이 실현될 경우, 경제·외교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즉 극동개발의 외적 환경으로서 한반도 정세 안정, 평화국가로서 러시아의 이미지 고양, 경제적 실리, 중국과 일본 견제, 미국의 영향력 견제, 역내 국제기구 가입 분위기 조성, 러시아의 국력신장 기회 획득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교류·협력단계에 진입하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한반도 통일문제를 주제로 하는 학술회의를 모스크바와 극동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에서부터 한반도문제 논의를 의제로 하는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창설하자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통일 실현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중재로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한편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소극적인 반응까지도 설득하고 위무하는 작업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 3. 북한 급변사태 전개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첫째, 대규모 민중봉기·주민학살시, 러시아는 우선 공식적 차원에

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면서 동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민주봉기세력에 대한 긴급 식량의료 지원을 천명한다. 그러나 비공식적 차원에서는 민중세력과 연계를 가짐으로써 북한 급변사태 전개과정 자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민중세력이 북한내에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경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중재역을 맡음으로써 차후의 통일과정에서 유사한 역할을 맡을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다.

둘째, 쿠데타로 인한 정권교체시, 親衛쿠데타의 결과 새로운 강경보수정권이 수립되면 러시아는 이를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존의 대북 정책기조에 입각한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반정부 쿠데타가 성공하고 새로운 개혁정권이 출범하면 러시아는 이를 즉각 승인하고 경제지원 등을 약속할 것이다.

셋째, 북한 내전 발생시, 러시아는 내전이 확산되어 러시아 극동지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내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북한 내전과 같은 역내 불안정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제창하고 북한 내전에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다자협력을 주도하고자 할 것이다.

넷째, 대남 무력도발시, 러시아는 우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즉각 중재를 자청할 것이며, 중재효과가 없을 경우, 러시아는 전쟁후 통일이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편을 들어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대량난민 발생시, 러시아는 강온 양면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인 바, 관용정책을 취할 경우, 러시아는 연해변경 지역에 임시 수용소를 설치하고 구호활동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에 대해 남한과 일본·미국 등 관련국, 국제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통제정책을 취할 경우, 러시아는 국경을 계속 봉쇄하면서 난민 유입을 계속 억제하고 이미 유입된 탈북난민들에 대해서는 더이상 방치하지 않고 임시수용소에 수용할 것이다. 러시아가 통제정책을 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난민처리과정에서 북한 탈출난민들이 러시아내 定住를 희망하는 경우 러시아는 가능한 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 4. 급변사태 진정이후 러시아의 역할

정치권력의 변화양태를 중심으로 급변사태의 결과를 분류하면, 정권유지(기존정권이 유지되면서 정책만 변화), 정권교체(사회주의체제하의 정권교체), 체제붕괴(사회주의체제 붕괴)로 대별할 수 있다.

정권유지의 경우, 쿠데타 또는 민중봉기를 성공적으로 진압한 북한 정권이 개혁정책을 취할 경우, 이 때의 러시아의 역할은 점진적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대동소이하게 된다. 반면에 강경정책을 취할 경우, 북한 체제는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급변사태 재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정권교체의 경우, 새로 집권한 사회주의적 개혁정권은 조기통일을 추진하거나 단계적 통일을 모색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아 단계적 통일의 경우보다 조기통일의 경우, 러시아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조기통일은 우선 북한의 신정권이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희망하는 경우로 나타날 소지가 많고 따라서 사실상 외세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역내 입지가 매우 취약한 러시아로서는 당장 한반도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체제붕괴의 경우, 우선 내전발생시, 국제적으로 북한 정세의 불안

정성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한반도 통일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되거나 또는 주변국들이 PKO 파견을 통해 북한의 내전에 개입하고자 할 것인 데, 러시아는 내전과정에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국제적 해결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것이다. 러시아가 내전 당사자 쌍방에 대한 영향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면 주변국중 최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체제 붕괴시, 러시아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급변사태 진전 과정에서 러시아가 어느 편을 지원하였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남한과의 통일논의과정에서 러시아가 취할 행동에 달려있을 것이다.

무력도발시,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의 편을 들어 북한을 양면공격하지 않는 한 러시아의 역할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5.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종합평가

러시아는 역내 역학관계의 열세로 인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이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과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발휘되고 신장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를 강조함으로써 미·중의 개입을 최소화하려 하는 동시에, 한반도문제의 다자주의적 접근을 주장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거듭 주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대화가 진전되고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화해·협력단계를 거쳐 남북관계가 통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천명하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 실현을 위해 주변국을 설득하는 등 통일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외교노력을 경주하는 등 적극적인 통일지원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러시아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을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호기로 인식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반 정책조치를 강구·추진할 것이다.

현재의 취약한 러시아의 입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러시아의 역할은 조기통일시 보다 점진적 통일시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점진적 통일시보다 급변사태 발생시에 효과적으로 그 역할이 모색되고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러시아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후 통일실현」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장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전개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화함으로써 한반도 통일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중재함으로써 조기 통일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소기의 정책목표를 거양하려고 할 것이다.

# - 목 차 -

I. 서론 .....	1
II.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전개과정 .....	3
1. 엘친의 친서방노선과 남한 중시 .....	3
2. 북한 핵문제와 러시아 .....	10
3. 리·북관계의 복원과 두 개의 한국 정책 .....	20
III.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	30
1. 한반도 정책목표 .....	30
2.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입장 .....	34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	35
IV. 점진적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	42
1.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 .....	43
2.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협조 .....	45
3. 남북대화 증재 .....	49
4. 남북경협 증재 .....	51
5. 한반도 군비통제 유도 .....	55
6. 통일협상 증재 .....	60

V. 북한 급변사태에서 러시아의 역할 .....	64
1. 북한 급변사태 전개과정에서의 역할 .....	64
가. 대규모 민중봉기·주민학살시 .....	66
나. 쿠데타로 인한 정권교체시 .....	68
다. 북한 내전 발생시 .....	69
라. 대남 무력도발시 .....	71
마. 대량난민 발생시 .....	72
2. 급변사태 진정이후의 역할 .....	77
VI. 결론 .....	81
참고문헌 .....	84

## I. 서론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관여하려 할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 통일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통일한국과의 관계 설정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정세의 핵심적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역학관계 변화에의 적응 또는 주도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유형은 다양한 기준에 입각하여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통일주체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합의통일과 일방이 타방을 흡수하는 흡수통일, 통일방법과 관련하여 평화적 방법과 철차에 의한 평화통일과 폭력에 의한 전쟁통일, 통일시기와 관련하여 급진적·조기통일과 점진적·단계적 통일 등 여러 분류기준에 입각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통일유형은 위의 여러 유형들이 교차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합의통일의 경우 당연히 평화통일이지만 조기통일과 단계적 통일로 나눌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가능하며, 위의 3개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모두 5개의 조합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유형 I: 합의·평화·조기형. 남북한이 즉각 통일 실현에 합의하는 경우이다.

유형 II: 합의·평화·단계형. 남북한이 점진적·단계적 발전구도에 따라 상호간의 동질성을 회복한 후 합의에 의해 통일을 실현하는 경우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이에 해당한다.

유형 III: 흡수·평화·조기형. 일방이 즉각 체제경쟁에서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타방에 평화적으로 흡수되는 통일이다.

유형 IV: 흡수·평화·단계형. 일방이 타방에 평화적으로 흡수되는 경

## 2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우이나 점진적·단계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형태이다. 「평화적 이행전략」이 이에 해당한다.

유형 V: 흡수·전쟁형. 일방이 전쟁을 통해 타방을 흡수·병합하는 통일이다. 이 경우 통일시기에 따른 구분은 의미가 없다.

한편 이상과 같은 분류유형들은 북한의 변화방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즉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고 통일실현을 위해 노력할 경우, 유형 I 과 유형 II의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또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체제위기가 심화됨으로써 민중봉기 또는 쿠데타 등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 북한이 대남도발을 감행하면 유형 V, 급변사태후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 그 정권의 성격에 따라 유형 III과 유형 IV 또는 유형 I 과 유형 II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반도 통일시나리오의 출발점을 북한의 사태 변화에 두고, 점진적·단계적 통일의 경우와 급변사태 발생시로 대별하여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살펴본다.

다만 이를 연구함에 있어서 먼저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전개과정을 개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II장에서 엘전 정권의 대한반도정책 전개과정을 논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III장에서 한반도 정책목표와 정책방향을 분석한다.

IV장에서는 점진적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러시아의 역할을 북한의 변화 유도,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협조, 남북대화 중재, 남북경협 중재, 한반도 군비통제 유도, 통일협상 중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V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대규모 민중봉기·주민학살시, 쿠데타로 인한 정권교체시, 북한 내전 발생시, 대남 무력도발시, 대량난민 발생시 등으로 나누어 추론하였다.

## II.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전개과정

러시아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정책 추진을 계기로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종래의 「하나의 한국」 정책을 수정하고, 「사실상의 두 개의 한국」 정책으로 전환하고 남북한 균형정책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남한에 대한 편향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90년 한소 수교로 「법률적 두개의 한국」 정책이 추진되면서부터 더욱 본격화되었다. 이로써 한·러관계는 크게 발전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러·북관계는 급랭되고 말았다. 그후 엘진·코지레프 팀이 추진한 친서방 노선에 대한 국내의 비판이 높아지면서<sup>1)</sup> 이와 함께 한반도정책에 대한 반성도 이루어져 차츰 러·북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1. 엘진의 친서방노선과 남한 중시

소련방 해체직후 엘진 대통령과 코지레프 외무장관은 북한과의 군사동맹 유지가 한·러관계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된다고 인식하여, 1992년 1월 로가쵸프(Igor' A. Rogachev) 외무차관을 대통령 특사로 평양

1)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냉전에서 결과적으로 패배한 러시아에게 앞으로 자본주의적 발전을 어떤 방식으로 모색하고, 서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다가왔다.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확립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 문제는 대서양주의(atlantizm)와 유라시아주의(yevraziystvo)간의 논쟁으로 표면화되었는데, 소련방 해체직후 코지레프 외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지도부는 서방과의 완전한 결함을 중시하는 대서양주의적 입장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입장은 그후 유라시아주의의 반격으로 1992년 말 이후 수정되었다.

#### 4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에 파견하여 1961년에 체결된 「소·북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개정을 북한측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동맹조약이 1996년 9월 10일까지 합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sup>2)</sup>

이는 당시 열린 행정부가 한반도정책을 성급하게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었음을 예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동맹조약, 특히 제1조 자동군사개입조항이 유지되는 경우 러시아가 한반도에서의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sup>3)</sup> 이것이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 소련시대였지만 불과 몇 개월전인 1991년 9월 갱신된 조약을 구 소련이 해체되고 새로이 러시아연방이 탄생되었다고 조약 개정을 즉각 요구한 것은 성급하다 못해 한반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이와 같은 홀대는 1993년초에도 나타났다. 러시아 대통령특사 쿠나제(Georgiy F. Kunadze) 외무차관은 1993년 1월 29일~2월 1일간 북한을 방문하여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1. 30) 및 김영남 외교부장(2. 1)과 각각 회담하고, 자동군사개입조항인 조약 제1조의 개정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러시아는 동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다는 방침하에 북한의 선제공격이 아닌 경우에 한해 피침 여부를 판단한 후, 러시아의 헌법절차와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군사개입을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sup>4)</sup> 쌍무관계의 법적

---

2) Yoke T. Soh, "Russian Policy toward the Two Koreas," in Peter Shearman, ed., *Russian Foreign Policy Since 1990* (Boulder: Westview Press, 1995), pp. 187~188.

3) 이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에 의해 도발되지 않는 침략의 경우, 동 조항에 의거하여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이행의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자동개입조항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Izvestiya*, 1992. 8. 13.

4) 그러나 쿠나제는 2월 2일 미 NBC-TV와의 인터뷰에서 자동개입조항 수정이 아니라 파기를 북한측에 요구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김영남은 확인을 회피하였다.

기초의 변경 필요성과 북한의 대러시아 외채 상환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쿠나제는 북한의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문제를 거론하였으나, 북한은 이 문제가 양국간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진 대통령은 이른바 대서양주의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친서방노선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에서도 당연히 남한에 대한 편향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고르바초프 시기 이래 추진해 온 기존 정책이었기 때문에, 친한정책 채택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 외부부내에서는 한국과의 관계개선만을 도모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으로서 한반도의 군사충돌을 피하면서 북한과의 군사동맹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고 한다.<sup>5)</sup>

이에 따라 러·북관계가 냉각되어 있는 가운데 한·러관계는 착실히 진전되었다. 코지레프 외무장관이 1992년 3월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상욱 외무장관은 러·북 동맹조약의 자동가입조항 삭제를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코지레프도 러·북조약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재검토한다”고 밝혔다.<sup>6)</sup> 10월 5일에는 노창희 외무차관과 쿠나제 외무차관간에 부산과 블라디보스토크의 총영사관 설치를 규정한 「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의정서」가 체결되었으며, 11월에는 마침내 엘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졌다.

엘진 대통령은 1992년 11월 18~20일간 서울을 방문하여 노태우 대통령과 「한·러 기본관계조약」을 체결(11. 19)하는 한편, 양국의 외무·경제·국방·재무 등 관련장관들은 별도 회담을 갖고, 이종과세방지

5) Leszek Buszynski, *Russian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1996), pp. 203~205.

6) *Izvestiya*, 1992. 3. 19.

## 6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협정, 세관간 협력협정, 경제공동위 구성규정, 문화협정, 군사교류 양해각서 등의 문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엘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연설하였다.

1992년 6월 29일 모스크바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최종문안을 확정된 「기본관계조약」은 양국이 공히 “자유, 민주주의, 인권존중 및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반자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1990년 6월 5일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 9월 30일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sup>7)</sup> 12월 14일 모스크바 정상회담, 1991년 4월 19~20일간 제주도 정상회담 등을 통해 축적된 양국관계가 명실공히 선린우호관계로 발전하였음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었다.<sup>8)</sup>

양국간 기본관계조약에는 군사협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한·러 양국은 군사교류 양해각서(1993. 1. 1 발효, 유효기간 1년, 갱신 가능)를 통해 양국간 군사협력 활성화를 합의하였다. 이는 냉전적 분단상태에 있는 한국이 공산주의 종주국이던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서, 그 내용은 한·러 양국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또는 참모총장)의 교환 방문을 비롯하여 군사훈련참관단 상호 파견, 해군 함정의 상호 친선 방문, 국방부 사절단의 군사교육기관 교환 방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sup>9)</sup> 이는 한·러 양국이 안전보장 분야에서도 협력관계를 발전시

7) 대사관 개설에 이어 1992년 10월 5일 노창희 외무차관과 쿠나제 외무차관은 부산과 블라디보스토크에 총영사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8) 「기본관계조약」은 1993년 4월 29일 러시아 최고회의에서 비준되었으며, 그 후 1993년 6월 7일 한승주 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코지레프 외무장관과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였다.

9) *Izvestiya*, 1992. 11. 20. 군사교류와 관련, 러시아는 한국측이 러시아 무기를 구입하도록 요청하였다. 1993년 1월 25일 파노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한 긍정적 요

킨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경협차관에 대한 이자 지급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1992년 11월 9~12일간 개최된 한·러 실무협약에서의 합의대로 구소련의 채무를 러시아가 승계한다는 법률문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집행된 4억 7,000만 달러의 소비재차관에 대한 11월분까지의 이자 1,260만 달러를 현금으로 상환하고, 10억 달러의 은행차관에 대한 이자 3,680만 달러를 1993년 상반기중에 알루미늄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향후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실리를 도모하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잔여분 집행이 유보중인 약 10억 달러의 소비재차관과 5억 달러의 연불수출을 계속 공여받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측도 차관공여 재개를 약속하였다.

엘젠 대통령의 방한 목적은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한·러 양국간의 선린·우호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한국의 협조를 확보하고, 둘째, 이미 공여된 경협차관의 연체이자를 지불함으로써 경협차관 잔여분을 공여받는 동시에, 양국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러시아 경제회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해 주기를 바라고, 셋째, 동·서 냉전시대에 반공보루로 인식되어 온 한국과의 관계를 군사협력관계로까지 발전시킴으로써 러시아의 평화이미지를 선전하고 아시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넷째, 한국에 대한 무기수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엘젠은 한·러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국가위신을 제고하는 데에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기

---

소로 간주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에 첨단무기를 판매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1993년 8월 20일 쇼힌 부총리는 한국에 대하여 러시아제 방어용 무기 구입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히고, 무기수출 대금을 지불 중단되고 있는 경협자금 이자로 대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대와 달리 한국으로부터 대러시아 차관재개를 약속받은 것 이외에는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엘젠은 시베리아의 자원 개발에 대한 한국측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젝트이름까지 열거하면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러 공동성명에서는 사하공화국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에 이르는 천연가스 파이프 건설구상과 나호트카 근교의 한국공단 건설구상의 검토가 언급되는데 그쳤다. 또한 한국 국회연설에서 엘젠 대통령이 한러 군사기술협정 체결을 제안하였던 것에서 나타나듯이 엘젠은 외화 획득수단으로서 무기와 군사기술의 매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당시 한국측이 비록 MIG-29 전투기와 S-300 지대공미사일 구입에 흥미를 보였다고 보도되었지만,<sup>10)</sup> 이 점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엘젠이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으로서 더욱이 동북아시아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지만,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었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적어도 엘젠은 한국과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경제교류·협력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북한측이 엘젠의 방한을 경제원조를 얻으려는 「구걸외교」로 평가하였듯이, 엘젠이 얻어낸 성과와 이미지는 사실상 기대이하였던 것이다.

아무튼 엘젠의 방한기간중 체결된 각종 문서와 엘젠 대통령의 국회연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당시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당시 러시아는 동북아정책 또는 아태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존의 일본 중시외교를 탈피하여 한국을 러시아의 중요한 외교·경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 엘젠 대통령의 극동

10) *Krasnaya zvezda*, 1992. 11. 21.

방문은 일본(92. 9. 13)에 이어 한국(9. 16)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북방영토문제로 인해 일본방문을 연기하는 동시에, 대일 관계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아시아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sup>11)</sup> 즉 엘젠의 대일 정책목표는 러시아의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경제지원을 유도한다는 것이었으나, 일본이 정경불가분 원칙에 입각하여 북방영토를 반환하지 않는 한 경제협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일계획 직전에는 북방영토를 일본측에 인도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었지만, 북방영토 인도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에 밀려 방일계획 자체를 연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sup>12)</sup> 이는 국내경제난 해소를 위해 서방의 경제지원에 의존하였던 고르바초프 정부가 만족할 만한 경제지원도 받지 못하고 따라서 경제난도 해결하지 못한 결과, 연방해체 위기까지 발전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엘젠 정부가 국내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게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제원조를 구걸하는 듯한 기존의 아시아 외교방식 보다는 중국식의 자력갱생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국내문제 해결을 중시하되, 아시아에서는 서방국가 가운데 한국을 중심으로 외교·경제·군사적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러시아의 국내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러시아의 아시아 진출 본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한반도정책에 있어서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단절하고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추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었다. 즉 “러시아는 북한

11) 엘젠의 친서방노선을 감안할 때, 경제대국인 일본과의 관계발전이 최우선과제였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12)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강원식,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러·일의 입장과 해결 전망,” 『통일연구논총』, 제1권 제2호 (1992), pp. 69~105 참조.

## 10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에 대한 모든 군사원조를 중지하고 있고, 금후에도 군사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그 대신에 한국과 군사기술협정을 맺고 싶다”고 열린 대통령이 한국 국회연설 속에서 강조하였듯이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한국과의 우호관계 강화를 중시하는 현실적 접근을 취하였던 것이다.<sup>13)</sup>

셋째, 아태지역에의 접근과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열린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불가분한 일부”이며,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완전한 참가자」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해 APEC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극동 및 시베리아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한국의 협력을 얻고 싶다고 하면서 33건의 프로젝트를 한국측에 제시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여전히 아태지역의 경제적 번영에의 적극적인 동참 의향을 보이면서 한국 등의 자본을 유치하여 극동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아시아정책에 있어서 핵심임을 의미한다.<sup>14)</sup>

## 2. 북한 핵문제와 러시아

북한은 1992년 1월 3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4. 9 비준)하고, 핵시설 및 핵개발 현황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

13) 톨로라야(Georgiy D. Toloraya) 러시아 외무부 한국과장은 “북한과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지원하는 것 ... 그것은 러시아 국경주변의 긴장을 완화하는 담보로 된다. 우리는 과거의 친구와 새로운 친구 가운데 하나만을 택일하는 선택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였으나(*Rossiyskaya gazeta*, 1992. 8. 28.), 명백히 당시 러시아는 북한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다.

14) 森本 敏, “冷戦後におけるロシアのアジア・太平洋政策,” 『國際問題』, 通卷 401號 (1993年 8月), p. 52.

IAEA에 제출(5. 4)하였다. 이 최초보고서에 의거하여 북한은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차에 걸쳐 IAEA의 임시사찰을 받았으나 군사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예측되는 영변의 2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마침내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서방측의 핵개발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sup>15)</sup>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대변인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이 스스로의 행동의 결과를 진지하게 고려하여,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과 NPT 탈퇴는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즉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러시아로서는 미국과 함께 “이러한 결정은 지역의 안정과 국제적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고 규정하는 공동성명을 발표(4. 1)하고,<sup>16)</sup> 북한이 NPT 탈퇴선언을 철회하기까지 러·북간 원자력협정에 기초한 전

- 15)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12. 12)하였으나, 18개월내에 받아들여 이기로 되어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수용을 거부하여 왔다. 그후 1991년에 들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IAEA와 안전협정 표준문안에 합의(7. 15)하였으나 정식 서명을 거부한채, 핵사찰 수용을 주한미군 및 핵철수와 연계시킬 의도에서 제4차 남북고위급 회담(10. 22~25 평양)에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제의하였다. 부시 미대통령의 전술핵 폐기선언(9. 28)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상응조치(10. 5) 등 국제적인 전술핵 구축 분위기속에서 주한미군의 핵철수가 기정사실화되자,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발표(11. 8)하였다.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12. 11~13 서울)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으나, 핵문제에 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 그후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핵무기재선언(12. 18) 이후 마침내 북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12. 31; 92. 2. 19 발효)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92. 3. 19)하고 1993년 1월까지 전체회의 13회, 위원장접촉 8회, 위원장접촉 1회를 개최하여 사찰규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남측의 「상호주의」와 북측의 「의심동시해소원칙」 등 입장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후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중단되었다.
- 16) 러시아는 1992년 6월 17일에도 한반도 핵확산 금지에 관한 러·미 공동성명을 채택·발표한 바 있다.

## 12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문가대표단의 교환을 유보한다는 점을 북한에 통고하는데<sup>17)</sup> 그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국제공조」의 대의를 빌어 러시아의 협조를 촉구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1993년 6월 한승주 외무장관의 러시아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한국측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이 보다 신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즈베스찌야」 논평은 북한의 NPT 복귀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서방측과 국제사회에 경솔하게 영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 핵문제가 국제공조체제의 압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한 외교」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8)</sup>

그 후 북한은 6월 11일 NPT 탈퇴를 유보하고 미국과 고위급회담을 통해 핵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12월 29일 미·북 실무접촉에서 7개 신고시설에 대한 IAEA사찰에 합의하였으나, 사찰의 성격 및 수준과 관련하여 북·IAEA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대북사찰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에 의한 제재문제가 대두되자, 북한은 1994년 2월 15일 마침내 IAEA에 7개 신고시설 사찰 수용의사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IAEA의 사찰이 실시(3. 3~14)되었다. 그러나 IAEA가 핵재처리 시설로 의심하고 있던 방사화학실험실에서의 잔류시료 채취를 북한이 거부함에 따라 북한 핵문제는 또 다시 급랭되고 말았다. 북한은 3월 21일 외교부 대변인성명을 통해 NPT 탈퇴를 재차 위협하고, 특사 교환을 위한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수석대표인 박영수가 「서울불바다」를 선언(3. 19)하기에 이르렀다.

---

17) Valery Denisov, "The Problem of Nuclear Nonproliferation in Korea,"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August 1994, p. 41.

18) *Izvestiya*, 1993. 5. 20.

이런 상황에서 3월 24일 추르킨(Vitaliy I. Churkin) 외무차관은 모스크바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8자회담을 제안하였다. 그것은 북한 핵문제를 남북한,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유엔, IAEA 등 8자간 다자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었다.<sup>19)</sup> 당시 러시아가 8자회담과 같은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기하게 된 것은 북한 핵문제 처리과정이 미·북간의 협상만으로 전환되면서 러시아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배제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북한 핵문제 처리과정이 IAEA의 대북한 사찰을 중심으로 IAEA와 UN의 틀 속에서 논의되던 시점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핵확산금지에 관한 라·미 공동성명」을 채택(1992. 6. 17)하고,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의 NPT 존속 및 조약 부과 의무 준수 촉구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한·미와의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후 1993년 6월 미·북회담이 개시(1단계 뉴욕 93. 6. 2~11; 2단계 제네바 93. 7. 14~19; 3단계 제네바 94. 8. 5~19, 9. 23~10. 21)되면서 북한 핵문제 처리과정이 미·북간의 직접 협상으로만 집약되자 러시아는 한·미와의 공조체제 보다는 다자주의적 국제회의 소집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며, 그 구체적인 표현이 8자회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입장 등 한반도 주변정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러시아가 8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를 제안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8자회담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찬부를 명확하게 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지만

19) "Rossiya i situatsiya vokrug Koreyskogo polucstrova," *Diplomateskiy vestnik*, No. 7~8. 1994. 4. s. 29~30.

국제회의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함으로써 러시아의 평화이미지를 선양하는 동시에, 남북한에 대한 외교적 균형을 취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아시아 안보문제 논의를 위한 다자회의 개최는 구소련이래 러시아의 전통적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이와 같은 8자회담 제의에 대해 당초 북한은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즉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4월 1일 러시아가 제안한 한반도 핵문제해결을 위한 다국간 교섭에 대한 '조선중앙통신(KCNA)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제재와 압력에 반대하고 정치적 교섭을 통한 해결을 보이려 하는 러시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러나 다국간 교섭 제안은 문제를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손성필 주러시아 북한대사도 "이 문제가 국제적 성격을 갖게 되면 그 해결이 더욱 복잡하게 된다"면서 소극적 반응(4. 13)을 보였다. 즉 핵문제는 발생원인으로 보나 그 성격으로 보아도 미·북간에 해결되어야 할 정치·군사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후 북한은 8자회담에 대해 긍정적 입장으로 태도를 전환하였다. 이는 어차피 실현 불가능한 제안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러시아의 반감을 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으며, 또한 5월 IAEA의 추가사찰 요구에 대한 거부로 재차 제재론이 부상한 가운데 제재론의 효과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깔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즉 김영남 외교부장은 6월 6~8일간 우크라이나 방문시, 러시아의 국제회의 제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6월 9일 손성필 대사는 러시아가 제안한 국제회의에 대한 긴급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방안은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몇 안되는 평화적 해결방안의 하나'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처음부터 8자회담에 대해 호의적인 대응을 보였다. 예컨대 한승주 외무장관은 4월 방러시에 "다국간 협의 개최에 관한

러시아의 제안을 건설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8자회담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8자회담 제의를 북한 핵문제 해결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서 그 후에도 계속 주장하였으나,<sup>20)</sup> 북한 핵문제는 러시아의 정책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대북 제재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는 북한이 IAEA 공식 탈퇴를 선언(6. 14)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었으나,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북한방문(6. 15~18)에서 만일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하고 핵위협을 중지하면 핵개발을 동결할 것임을 김일성이 약속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미·북회담이 재개되어 마침내 제네바 기본합의문(Framework Agreement)이 채택(10. 21)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초점이 지금까지의 대북 핵사찰문제에서 대북경수로 지원문제로 옮겨가게 되었다.<sup>21)</sup>

북한 핵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러시아가 보인 반응은 러시아가 한국의 입장만을 지지하여 이 문제에 경솔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반성이었다. 이는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점차 친서방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이른바 유라시아주의와 국익중시노선이 강조되고 있던 러시아 외교의 일반방향이 한반도정책의 재검토를 유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1993년의 마지막 3개

20)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접근의 일환으로 8자회담이외에도 미·러·중·북이 대화에 임하는 4자회담(94. 3. 21), 8자 플러스 영국·프랑스의 10자회담(94. 6. 23)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21) 기본합의문의 핵심내용은 ①북한의 핵시설 해체 및 대북 경수로 지원, ②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 ③미국의 대북한 핵불사용 보장과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 약속, ④북한의 NPT 복귀 등이다.

일은 최고회의 의사당 포격(10. 4), 신군사독트린 채택(11. 2), 연방의 회 선거 및 헌법 채택 국민투표(12. 12) 등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겹치던 시기였으며, 이 시기 동안 러시아 대외정책결정 엘리트들은 러시아의 국민적·국가적 자아정체성의 문제로 고심하였고, 마침내 러시아의 고유한 국가적 이익과 러시아의 현 사회경제구성에 부합되는 발전방식을 강조하게 되었다.<sup>22)</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한편중노선에서 탈피하여 러·북관계 복원·유지를 고려한 것은 당연한 추세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구소련·러시아는 45,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던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NPT체제 유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갖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접경국가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구소련 핵폐기문제와도 관련하여 나쁜 선택으로 작용한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 및 미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구소련 핵관리의 직접적 당사국인 러시아로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북한 핵문제에 대해 러시아는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은 미·북, 남북, 북·IAEA 등 3각 구도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러시아의 개입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만일 러시아가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남북한에 대한 동시수교국으로서의 입지를 활용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 조정자·중재자로 기능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던 것이다.

셋째,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에서 중국에 비해 한반도문

22) 강봉구,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1993. 3~1995. 6):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20권 제1호 (1996년 봄), p. 170.

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지가 제한적이고 더욱이 한국이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서울불바다」 선언이 나온 후 김영삼 대통령은 국제공조체제의 일환으로서 일본(3. 24~26)과 중국(3. 26~30)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국제공조체제를 가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대북 제재 반대를 주장하고 있던 중국에게는 무언가의 다른 해결방도가 있는 것처럼 비쳐졌던 것이다. 결국 러시아는 한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국으로부터 무시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며,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즈베스찌야」는 적극적인 중국외교와 비교하면서 모스크바가 북한에게 무언가의 돌파구를 제시함으로써 러시아의 영향력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sup>23)</sup> 러시아는 북한을 한반도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러시아는 한반도문제가 아태지역에서의 러시아의 행동반경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네바 미-북합의로 인해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가 대두되자, 북한은 러시아형 경수로의 도입을 희망하고 러시아도 자국형 경수로의 공급을 생각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제네바에서 미-북간에 기본합의문이 채택되자 외무부 공식논평(10. 27)을 통해 이를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기초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NPT 기본원칙 준수문제, 한반도 비핵화 이행문제, 러시아 국익의 유지문제 등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8자회담 개최를 거듭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변화된 새로운 상황속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

23) *Izvestiya*, 1994. 3. 24.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자국형 경수로 공급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러시아형 경수로가 공급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동안의 소원했던 러·북관계를 일거에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미·북간의 양자협상의 틀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한국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형 경수로 공급을 생각하고 있었다.

엘젠은 김일성 사망직후 러시아형 경수로를 공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으며,<sup>24)</sup> 시드랜코 원자력·에너지부 차관은 러시아를 방문한 미·북협상 미국측 대표인 갈루치 미 국무차관보에게 러시아의 최신형 경수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sup>25)</sup>

한편 북한은 경수로 공급문제가 제기되자 처음부터 러시아형 경수로 도입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미 1994년 6월 북한을 방문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해리슨에게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러시아형 경수로 도입 희망을 밝혔으며,<sup>26)</sup> 엘젠 대통령도 1994년 9월 파노프 외무차관을 대통령특사로 북한에 파견하여 이 문제를 북한측과 긴밀하게 협의하였다. 러시아형 경수로 도입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은 첫째, 1985년 체결된 러·북 원자력협정이 여전히 유효하고, 둘째, 북한 기술자들이 러시아의 기술에 숙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한국형 경수로 도입을 회피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이 더욱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95년 3월 대북 경수로 공급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24) 「RP北朝鮮政策動向」, 第229號 (1995年 3月 15日), p. 26.

25) *Izvestiya*, 1994. 8. 5.

26) "North Korea Offers to Freeze Program," *News from the Carnegie Endowment*, June 16, 1994, p. 2. 러시아형 경수로의 비용과 관련하여, 당시 김일성은 해리슨에게 그것이 미국, 일본, 한국의 대러시아 신용공여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讀賣新聞』, 1994年 6月 15日.

(KEDO)가 구성되고, 그 설립협정에 약 1000MW 용량의 한국 표준형 경수로 2기의 공급이 명기되자, 북한은 이에 크게 반발하였으며, 러시아는 자국형 경수로 공급을 전제로 KEDO참여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경수로 공급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첫째, 이 문제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둘째, 자국형 경수로를 고집하는 것이 경수로 공급을 둘러싼 남북교류를 방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남북교류를 바라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결국 한국으로 하여금 러시아형 경수로를 공급토록 한다는 북한의 변형된 제안도 있었지만,<sup>27)</sup> 대북 경수로 공급문제는 미-북간의 교섭에 의해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한국형으로 귀착(6. 12)될 수밖에 없었다. 그 직후 「프라브다」가 “러시아는 이 지역의 외교무대에서 미국에게 그 지위를 빼앗겼다. 이러한 패배를 맞본 후 러시아가 다시 그 지위를 되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고 논평하였듯이,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목표는 또 다시 좌절을 맛보았던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의 핵개발을 유발하고 나아가 일본의 핵무장을 유도할 것이라는 도미노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sup>28)</sup> 물론 자국에 인접한

27) 베를린에서 개최된 경수로공급에 관한 전문가회의에서 북한은 ①러시아가 한국에게 채무변제용으로 경수로를 주고, ②한국은 이 경수로를 북한측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RP北朝鮮政策動向」, 第232號 (1995年 5月 31日), p. 82. 이 제안은 물론 한국과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8) 코지레프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남북국경을 따라 핵전선(核戰線)이 형성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이들 국가의 핵잠재력 제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Izvestiya*, 1994. 6. 18. 한편 북한 핵개발이 일본의 핵무장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는 Andrei V. Kortunov, “The Northeast Asia Policy of Russia in the 21st Century,”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Korea's Security Strategy*, cohos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Research Institute for

## 20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국가의 핵무장화 저지라는 차원을 간과할 수 없으나,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1994년 시점에서 북한이 5~6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 러시아 대외방첩국을 제외하면, 엘젠과 외무부 및 원자력부는 모두 북한이 플루토늄 보유량도 불충분하고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도 아직 저급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구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sup>29)</sup>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문제 해결을 위해 성급하게 국제제재를 발동할 것이 아니라 이른바 8자회의와 같은 국제회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며, 동시에 그 배경에 한반도정책의 전반적인 재정립 필요성을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수로 공급문제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 핵문제가 제네바 합의의 틀 속에서 전개되는 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 3. 러·북관계의 복원과 두 개의 한국 정책

엘젠과 코지레프의 서방협조외교는 1992년 중반부터 러시아 국내에서 비판의 표적으로 되었다. 그리고 엘젠 정부가 추진한 급진적인 남한 접근정책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악화시킨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국내에서 초국가주의자, 보수파, 그리고 공산주의자 등의 반발을 초래했다.<sup>30)</sup> 이런 상황속에서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상실이 1993

---

International Affairs, June 9~10, 1997, Seoul, Korea, p. 12 참조.

29) *Novoe vremya*, No. 26, 1994, str. 18; *Moskovskie novosti*, 1994. 1. 9~16.

30) *Pravda*, 1993. 5. 7; *Pravda*, 1993. 7. 1; *Izvestiya*, 1994. 6. 18.

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이후의 전개과정 속에서 사실로 드러나자 였전과 러시아 정부는 그 간의 한반도정책 추진과정에서 범한 실책을 점차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도 1993년 후반기부터 대러관계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당시 한·소 수교(90. 9. 30)와 한·중 수교(92. 8. 24)로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고, 1991년 구소련 구성공화국들과 체결한 경제협정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서방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도 핵문제 때문에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가 친서방외교를 국익중심의 독자외교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대러관계의 회복을 모색하게 되었다.<sup>31)</sup>

이리하여 구소련해체후 처음으로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북한 경제대표단이 1993년 8월 6~16일 러시아를 방문하였으며, 11월에는 Foxtrot급 4척과 Golf-II급 10척 등 퇴역잠수함 14척이 북한에 고철용으로 판매되는 등 경제·군사교류가 재개되었다.<sup>32)</sup> 그 후 1994년에 들어서는 관계복원이 본격화되었다. 3월 하순에는 파노프(Aleksandr N. Panov) 신임 외무차관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침략받을 경우 러시아는 지원할 것”이라는 발언이 전해지고, 5월에는 이인규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정부대

31) 여인곤, 「러·북관계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5-01 (1995. 9), pp. 40~41. 여인곤 박사는 러시아·북한관계를 1992년~1993년 전반기의 악화기, 1993년 후반~1994년 전반의 회복기, 1994년 후반기이후의 재정립기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보론쭌프 상임연구위원은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이 1994년말을 기점으로 균형정책으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Aleksandr V. Vorontsov, “Koreyskaya politika RF v pervoy polovine i serepine 90-kh gg.,” Tsentr Koreyskikh Issledovaniy, Institut Dal'nego Vostoka RAN, *Politicheskie, ekonomicheskie i kul'turnie aspekty ob'edineniya Korei, chast' II* (Moskva: IDB RAN, 1997), s. 84~93.

32) 러시아의 대북 고철잠수함 판매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심각한 우려를 야기시켰다. 자세한 내용은 여인곤, 앞의 연구보고서, pp. 44~46 참조.

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이인규·파노프 회담에서는 “지난 시기 서명된 러·북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관계를 귀중히 여기며 앞으로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향을 표시하였다.”<sup>33)</sup> 그리고 김일성 사망(94. 7. 8) 이후에는 엘진 대통령이 깊은 조의를 표명(7. 10)하고, 러시아 외무부도 “북한 지도부의 교체가 양국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양국간 선린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성명을 발표(7. 10)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가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며, 북한의 새로운 정권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파노프 차관을 대통령특사로 북한에 파견(9. 20~24)하여 김정일 정권 지지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sup>34)</sup>

1995년 5월에는 그라쵸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침범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졌던 1996년 4월에는 이그나텐코(Vitaliy N. Ignatenko) 부총리, 파노프 외무차관 등 러시아 정부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90년 이후 중단되었던 경제공동위원회와 외무차관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셀레즈노프 국가두마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하원대표단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5. 26~29)하였다. 그후 1997년 4~5월 러시아 하원대표단(단장 블라지미르 루킨 국제문제위원장)이 방북했으며, 5월에는 러시아 항공운수대표단(단장 겐나지 자이체프 항공국장)과 통신정보대표

33) “외교부 대표단, 러시아 방문중 핵문제 논의,” 「내외통신 종합판(52)」, (서울: 내외통신사, 1994. 4. 1~6. 30), p. 111.

34) *Izvestiya*, 1994. 9. 28; *Krasnaya zvezda*, 1994. 10. 6. 러시아 자연과학원은 1997년 1월 15일 과학·경제발전 업적을 평가하여 김정일에게 과학원 명예회장을 수여(손성필 대사가 대리 수여)하였다. “러시아과학원, 김정일에 ‘영예회장,’” 「내외통신」, 제10425호 (1997. 1. 17, 2편).

단, 6월에는 러시아 하원대표단(단장 미하일 모나스트리츠키 국가두마 지정학문제위원회 동남아 및 아태지역분과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각종 협정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유대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북간에는 1996년 이후에만도 무역경제·과학기술협력위 의정서(96. 4. 12), 수산협조 합의서(96. 10. 12), 투자보호협정(96. 11. 28), 의학·과학협조협정(96. 11. 29), 과학협조협정(96. 12. 16), 문화협조협정(96. 12. 26), 여행협정(97. 1. 24), 경제협력의정서(97. 2), 과학기술 협조의정서(97. 4. 10), 항공운수협정(97. 5. 21) 등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러·북간 군사교류도 점차 복원되었다. 러시아가 계속 강조하여 왔듯이 러시아의 대북한 무기공급은 중단된 것으로 보이나, 부품공급·장비유지 차원의 교류·협력은 적은 규모이나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북관계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비록 러시아가 구소련 당시 건설된 산업시설의 복원·가동을 목표로 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모색·추진하고 있으며,<sup>35)</sup> 북한은 특히 농업, 건설, 수산업 부문에서의 러·북 협력에 기대를 걸고 과학기술·임업·경공업·운수분야

35) 1996년 4월 경제공동위 개최이후 러·북간 인적 교류 또는 회담이 있을 경우마다 구소련의 지원하에 건설된 북한내 산업시설의 재가동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1996년 5월 북한을 방문한 쉘레즈노프 국가두마의장은 구소련의 지원하에 건설되었던 원유가공공장과 방직공장 등 북한내 경제시설들이 북한의 경제난으로 원활하게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위한 대북 경제지원을 시사하였으며(“러 하원의장, ‘북한경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 「내외통신」, 제10082호 (1996. 6. 4, 2면)), 러·북 투자장려 및 호상보호협정 체결식장에서 손성필 주러 북한대사는 “우리나라(북한)에는 소련시기 소련의 기술과 설비에 의해서 건설된 많은 큰 공장들이 있으며 이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와 기술 재건을 위한 분야에서 두 나라가 얼마든지 많이 협조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나진·선봉지대에서의 투자·수송 및 기타 공시분야에서의 많은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러시아방송」, 1996. 12. 3; “러·북간 ‘투자보호협정’ 내용 공개,” 「내외통신」, 제10360호 (1996. 12. 4, 1면)).

의 협력을 위한 실무기관을 발족시키는 등 러시아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sup>36)</sup> 1996년 9월 12일 평양주재 러시아 통상대표부가 폐쇄되었던 것에 나타나듯이 러·북 경제협력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러·북간 무역고는 1993년 4.3억 달러, 1994년 1.3억 달러, 1995년에는 겨우 1억 달러로 축소추세에 있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높아가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6. 1~3)하여 제2차 한·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지원카드를 교묘하게 구사하여 러시아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동조하도록 압박하였다. 이에 따라 엘친 대통령은 216점에 이르는 한국전쟁 관련 소련정부 내부문서 복사본을 한국측에 전달하였으며, 러·북 동맹을 1996년에 폐기할 것이며 차후 북한과 어떠한 군사동맹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자동개입조항이 유명무실화되었다”고 언명하고 북한의 주도하에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북한을 지원할 의향이 없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임을 밝히는 등 재차 남한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인 북한의 핵개발 의혹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가 현 단계에서 시기상조이며 러시아가 주장하는 8자회담의 장에서 협의되어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대북제재 실시를 주장한 한국측의 입장과는 일선을 긋고, 남북한에 치우치지 않는 독자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최종일, 한·러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는데, 공동선언은 한·러 기본조약을 기초로 하여 양국관계를 착실하게 발전시킬 것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자유, 민주주의, 법질서, 인권존중 및 시

36) 「러시아방송」, 1997. 3. 17; “북, 대러시아 경협확대에 관심,” 「내외통신」, 제 10517호 (1997. 3. 19, 2편).

장경제라는 양국의 공통가치에 기초하여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sup>37)</sup> 그 일환으로서 한·러 공동선언에서는 한국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의 입후보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와 러시아의 아·태경제협력회의(APEC) 가입에 대한 한국의 지지가 언명되었다. 이 이외에도 김대통령 방러를 계기로 한·러 해난방지협정이 체결되는 동시에 청와대와 크레믈린을 연결하는 핫라인 설치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경협차관 변제문제도 논의되었다. 러시아측은 북한에 대한 무기부품 공급재개를 일시 동결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부품공급 중단조치를 실천할 경우 입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 경협차관의 변제수단으로 러시아제 무기를 한국이 구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sup>38)</sup> 러시아의 요청을 받아 차관 상환에 관한 실무교섭이 재개되었으며, 그 결과 1994년 9월 상순 러시아측이 경협차관을 무기와 방산물자 및 원자재 등으로 현물상환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1995년 7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러시아의 대한 무기인도가 실현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탈냉전기의 한·러관계를 상징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1996년 들어 T-80U 전차, BMP-III 장갑차, METIS-M 대전차유도탄, IGLA 지대공미사일 등 1억 9,700만 달러 상당의 러시아제 무기가 도입되고, 이들 장비로 무장한 기계화부대가 한국 육군에 창설되었다. 8월에는 러시아 무기수출회사 로스보오루제니에 서울지사가 설립되었으며, 11월에는 김동진 국방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로디오노프 국방장관간에 「한·러 군사기술·방산 및 군수협력협정」을

37) *Diplomatičeskij vestnik*, No. 13~14 (1994. 6), s. 12~15.

38) 齊藤元秀, “ロシアの朝鮮半島政策の檢證,” 『ロシア研究』, No. 24 (1997年 4月), p. 105.

제결(11. 4)하였다.

한편 대한 경협차관문제와는 별개로 1994년 6월 러시아는 소련 태평양함대의 대형 항공모함이었던 민스크호와 노보시비르스크호를 한국의 민간업자에게 중추장비를 해체하지 않은 채 매각하였다.

사실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서는 무기를 판매하면서도 최신편 무기 와 군사기술 공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SU-27 전투기와 SU-35 전투기 등의 공동생산을 거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초로 예정된 한국의 차세대주력전투기(FX) 사업 선정을 위해 미국, 프랑스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과 성능이 비슷하지만 그 보다 30% 정도 값싸고 한국지형에도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S-300 지대공미사일 수출교섭도 적극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기술협력을 얻어 한국이 1,800톤급 중형잠수함을 건조중이라는 보도도 있다.<sup>39)</sup>

이와 같은 한-러 군사관계 진전에 대해 북한은 현재 한반도의 긴박한 상황에 비추어 러시아의 군사장비 반출은 '불은 불에 키질하는 격의 무모한 처사'이며 '전쟁도발을 부추기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위'이므로 러시아는 그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하게 비난(9. 30)하였다.<sup>40)</sup> 그러나 반발의 목소리는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타났다.<sup>41)</sup> 미국은 러시아제 무기도입이 한국의

39) 러시아 「엑스페르트」지에 의하면, 러시아 군수산업계는 한국이 SU-35와 S-300 등 러시아 무기를 대량 구매한다면 러시아가 미국과의 무기판매경쟁에서 앞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한국을 새로운 희망으로까지 간주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6. 9. 20.

40) “‘러’ 군사장비 한국제공 맹비난,” 「내외통신」, 제10260호 (1996. 10. 1, 1편). 북한의 비난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한-러 무기구입 ‘새전쟁 준비’ 비난,” 「내외통신」, 제10571호 (1997. 4. 24, 1편) 참조.

41) 커트 캠벨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차관보(97. 3), 살리 캐슈빌러 합참의장(4. 8),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4. 9) 등은 러시아제 지대공미사일과 전투

무기체제를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한국이 러시아로부터의 무기도입을 미국 무기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sup>42)</sup>

한편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1996년 9월 10일 정식으로 실효하였으며,<sup>43)</sup> 이와 함께 구소련이래 러시아군이 항유해 온 북한 상공통과권과 기항권도 소멸되어 버렸다. 러·북 동맹조약의 제1조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폐기 또는 동 조약 개정문제는<sup>44)</sup> 쿠나제 외무

기 구입 반대의사를 공식 표명하였다. 동시에 1997년 6월에는 스텔어 미사일 구입을 둘러싼 미국측의 압력도 강화되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측은 미국측 압력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수호이 전투기의 경우, 한국 공군의 요구에 맞춰 개조할 뿐만 아니라 기술협력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이그나텐코 칼럼: 한·러 군사기술협력,” 「조선일보」, 1996년 11월 20일 참조. 한편 UAE도 지대공미사일 구입과 관련, 러시아제 S-300 대신에 미국제 패트리엇를 구입하도록 미국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ane's Defence Weekly*, April 16, 1997; 「조선일보」, 1997. 4. 17.

- 42) 1996년 7월 3일 발표된 미 군비관리군축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2~1994년간 동아시아지역 무기수출의 54%를 미국이 공급하였는데, 대만과 일본에 공급된 무기의 전부와 한국에 공급된 무기의 43%를 공급하였다. 러시아와 독일은 전체의 15%, 11%를 차지하였는데, 러시아가 공급한 무기의 거의 전부는 중국이 도입하였고, 독일은 한국무기의 반수를 공급하였다고 한다. 米軍備管理軍縮局, “世界の軍事費と武器輸出に關する報告書(要約下),” 「世界週報」, 1996年 10月 15日, p. 69.
- 43) 러시아와 북한을 군사동맹관계로 묶어 온 이 조약은 공식폐기 이전부터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식 폐기조치는 실질적인 의미보다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안보를 지탱해 온 중·북 동맹조약과 러·북 동맹조약이라는 양대축 가운데 하나의 축이 무너지게 되며, 이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즉 러·북 군사동맹의 파기는 북한의 대남 전쟁도발 가능성을 그만큼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북 동맹 관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북한으로 하여금 대미 관계 개선을 더욱 적극화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앞으로 러·북 군사동맹 폐기로 인한 안보불안을 완화·해소하는 차원에서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분단이 냉전의 산물이었다고 탈냉전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러·북 군사동맹조약의 폐기는 냉전시대의 군사적 대결 유산을 하나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통일에 한걸음 다가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4)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되고 9월 10일 평양에서 비준서가 교환

차관의 1993년 방북시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1. 30) 및 김영남 외교부장(2. 1)과의 회담에서 이미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1994년 모스크바 한-러정상회담(6. 2)에서 열린 대통령이 동 조항의 사실상 사문화를 공언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그 후 파노프 방북(94. 9)시에 이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1996년 조약 만료시까지의 기존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굳이 미리부터 거론하여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5)</sup> 그러나 기한만료 1년전에 조약폐기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조약규정 6조에 의거하여 마침내 1995년 8월 조약 폐기와 새로운 우호조약 체결의사를 공식 통보하면서 자동 군사개입조항이 배제된 새로운 「러·북 우호관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약」 초안을 북한에 전달하였던 것이다.<sup>46)</sup>

북한은 1996년 9월 3일 북한측 초안을 러시아측에 제시하였는데,

---

되면서 10년 기한으로 효력을 발생한 「러·북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제6조에서 체약 일방이 기한만료 1년전에 조약 폐기희망을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의 핵심 조항은 전문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친선관계”를 규정한 이념적 동맹조항과 제1조의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군사적 동맹조항이다. 이 가운데 특히 군사적 동맹조항은 이른바 자동군사개입을 규정한 것인데,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경우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군사개입한다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걸림돌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조약상의 북한피침공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북한이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한반도 분쟁상황을 선언할 수 있어 그 악용이 우려되어 왔다.

- 45) 파노프는 귀국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1년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평양에 대한 군사원조 규정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침략일 경우에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며, 침략의 본질은 모스크바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고 표명하였다.
- 46) 1996년 7월 22일 한-러 외무장관회담에서 프리마코프 장관은 1995년 8월 당시 신조약의 초안을 전달한 사실과 새로운 조약에서 자동군사개입조항이 배제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러시아측 초안에 대해서는 *Moskovskie novosti*, 1996. 10. 17 참조.

러시아 외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러시아안과 유사”하였다고 한다.<sup>47)</sup> 새로운 조약의 문안 작성과 체결교섭은 1997년에 들어 카라신(Grigoriy B. Karasin) 외무차관과 이인규 외교부 부부장간의 협상(1. 21~25 평양; 6. 16~17 모스크바)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

47) 「朝日新聞」, 1996. 9. 10.

### Ⅲ.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 1. 한반도 정책목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①러시아 극동지역의 평화로운 주변환경 유지(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북한 핵개발 저지, 한반도비핵화 실현), ②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한 실리추구 및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 ③아태 진출의 교두보 확보 등이다.

첫째, 러시아는 국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로운 주변환경 조성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는 한반도 내부의 정세안정 차원에서 남북한간 갈등과 전쟁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인식에서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을 권장하고 있다. 이 점은 한·러 공동성명(92. 11. 2 서울) 6항에서 한반도 통일이 남북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남북대화 진전을 위해서는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던 것에 잘 나타난다.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모험주의적 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러시아의 아·태정책 추진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남북한과의 양자관계 차원에서 남북한 쌍방 모두에 대한 선린우호관계 유지·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한·러관계의 전면적 발전과 러·북관계 복원·유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동북아에서는 물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러시아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발전 및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역할 수행을 통하여 아태 진출을 위한 「돌파구」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의 도움을 통해 역내 경제협력기구에의 가입을 실현하고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아태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1992년 12월 발표한 외교정책문서 「외교이념」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이 ①국경지역에서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②아태지역 국제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러시아 외교의 행동반경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명백히 언급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48)</sup>

즉 아태지역에서 러시아는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행동반경이 극도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변경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내 정세변동의 시금석인 한반도정세 변화를 러시아가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 과정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한반도정세 변화의 파급효과로서 나타날 전반적인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정세변화에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태정책의 전반적인 애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한국이 역내 정세변동의 시금석 또는 단초로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자고르스키 박사는 러시아 외교에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48) "Kontseptsiya vneshney politiki RF," *Diplomaticeskij vestnik*, spetsial'nyy vypusk, 1993. 1.

같이 강조하고 있다. 즉 “지역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은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러시아는 현재 유고슬라비아에서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시아는 세계적·지역적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아시아에서 90년대 러시아가 성취한 것은 ARF와 대중 전략관계이나, 이 두가지는 모두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ARF는 토론의 장에 불과하고 중·러관계는 중국의 군사패권화로 러시아를 오히려 위협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는 동북아에서 러시아가 정치·외교활동을 펼칠 수 있는 최선의 지역(most appropriate area)이다.”<sup>49)</sup>

러시아가 현재 한반도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남북한 갈등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하기 보다는 8자회담 개최 제의(94. 3. 24)와 4자회담 반대 등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왔다. 더욱이 8자회담 등 한반도문제에 대한 다자주의 접근도 사실상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이 IAEA와 UN이라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미·북간 쌍무협상 차원으로 전환되자, 비로소 자국의 입지 확보를 위해 서둘러 제안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상이 강하며, 8자회담 자체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통하여 남한과의 관계에서 실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 적극 개입하려 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난, 러·북간 이념적 거리감, 중국요인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요인이 적지않다.<sup>50)</sup>

49) Alexei V. Zagorsky, “The Roles of Major Powers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ward the 21st Century: Russian Perspective,” presented to the 7th International Defense Conference, held by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on November 4~6, 1996, Seoul, pp. 9, 10.

그러나 한반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정책목표가 반드시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점차 적극화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한반도를 이용하여 아태외교의 돌파구로 삼는다는 세번째 목표는 첫째와 둘째 목표에 이은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역내 진출을 희망하면서도 역내 행동반경이 극도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타 역내국가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국을 통한 아태 진출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과 미국은 러시아의 아태진출에 소극적 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최근 러-중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러시아의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돌파구 개념」에 입각한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아태정책 또는 동북아정책의 중추적 부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이 지금까지의 소극적·주변적 모습과는 달리 적극화될 가능성이 크며, 그것은 또한 「전방위 적극외교」라는 러시아 외교의 새로운 정책추진방향에 의해서도 요구되고 있다.<sup>51)</sup>

50) 균형정책이라는 것이 실질적 차원에서 균형있게 추진되기는 매우 어렵다. 적어도 남북한 균형정책 또는 두개의 한국정책은 기본적으로 브레즈네프시대 말기이후부터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시기별·상황별로 어느 한쪽에 실질적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북한편중·남한편중·북한복원」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러·북관계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러시아의 대한반도관계에서 대한 편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대체로 국내 러시아 전문가간에 공감되고 있다.

51) 전방위 강대국외교는 프리마코프 외무장관 취임이후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의 새로운 외교정책방향이다. 신국제질서에서 미국의 균형자·조정자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전세계적 수준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무대를 세분하여 지역수준에서 또는 현안수준에서 미국의 돌출을 저지함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모색하고 상대적으로 약화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 「강대국외교」라면, 중국·일본·독일 등 강대국들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국가와 모든 부문에서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강대국

## 2.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입장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시민사회 형성에 최적한 외적 조건의 창출”을 주요 외교정책목표로 제기하고 있는 데,<sup>52)</sup> 주변정세의 안정은 러시아의 국내번영을 담보하는 일차적인 외적 조건이 된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필수적이며, 특히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인접지역의 정세 안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폭발할 경우, 러시아는 남북한 쌍방에 대한 복합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한반도정세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즉 어느 일방에 대한 지원은 다른 일방의 적대적 반발을 가져올 것이므로 남북 쌍방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른바 분쟁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미·중·일 등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또한 남북한의 뿌리 깊은 불신과 대립을 고려할 때, 중재역할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러시아가 한반도에서의 사태전개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될 가능성도 크며, 이런 점에서도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에 부정적 영

---

들과의 대립·갈등소지를 줄여 견제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지원을 확보하여 국력신장에 매진하려는 것이 「전방위의교」이다. 등거리전략을 통한 세력균형정책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식, 「한·러 안보협력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6-22 (1996. 12) 참조.

52) 이는 러시아 외무부가 1992년 12월 1일 발표한 외교정책문서에서, 구소련 각국에 남아있는 러시아계 주민의 보호 등 「시민의 이익」 옹호, 핵무기 삭감을 통한 「핵무기가 위협이 되지 않는 구조」 형성 등과 함께 외교정책목표로서 제시한 것이다. “Kontseptsiya vneshney politiki RF,” *Diplomaticheskij vestnik*, spetsial'nyy vypusk, 1993. 1.

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은 기본적으로 평화분위기를 활용한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정책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필연적으로 동북아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지며, 이는 동시에 여전히 강력한 러시아의 극동군사력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않고 있는 역내 국가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특히 대일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러시아의 대일 정책을 결정적으로 후퇴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근 개선·강화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대중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러·중 양국이 기본적으로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외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남북한과의 친소(親疎)관계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러·중관계의 갈등요인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주요한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최근 북한의 휴전협정 사문화전략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 차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일반적으로 말하여 주변국들은 남북대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국가별로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통일된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한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이 장래 각국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통일한국이 국력을 신장하여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즉 남북한을 현재 수준에서 통합하더라도 통일한국은 상당한 국력을 보유하여 세계 188개국 중 통일된 한국의 면적은 78위, 인구는 12위, 국민총생산은 11위를 점하게 되며,<sup>53)</sup> 군사력도 미·일·중·러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의 잠재적 군사대국이 된다.

<표 1> 통일한국 및 주변국가의 경제력 비교

	면적 (1,000km <sup>2</sup> )	인 구 (100만명)	국민생산 (1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달러)
미 국	9,385	265.6	7,246	26,200
일 본	378	125.5	4,700	21,600
중 국	9,600	1,210.5	560	2,800
러 시 아	17,075	149.1	1,110	6,600
통일한국	221.6	69.5	443	-
남 한	99.2	45.2	422	12,100
북 한	122.4	24.3	21	1,000

자료: *The Military Balance, 1996~1997* (London: I.I.S.S., 1996), pp. 22, 113, 179, 184, 186, 187.

\* 국민생산은 1995년도치이며, 북한은 GNP, 그의 GDP.

53) Donald S. Macdonald, "The Role of the Major Powers in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5, No. 3 (Summer 1992), p. 136. 특히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 등이 결합하면 자체의 시장확보율이 증대되어 대외무역 의존도가 격감할 것이며, 군사력 감소 및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은 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통일한국 및 주변국가의 군사력 비교

	현역군 (1,000명)	예비군 (1,000명)	국방예산 (10억달러)	전함 (척)	전투기 (대)
미 국	1,483.8	1,880.6	266.4	1,150	4,520
일 본	235.5	47.9	45.1	160	510
중 국	2,935	1,200	8.4	1,080	6,160
러 시 아	1,270	2,400	48	2,150	6,900
통일한국	1,714	9,200	18.0	850	1,300
한 국	660	4,500	15.6	230	490
북 한	1,054	4,700	2.4	620	810

자료: 현역군·예비군·국방예산(1996년) 통계는 *The Military Balance, 1996 ~ 1997* (London: I.I.S.S., 1996), pp. 22, 113, 179, 184, 186, 187, 188; 전함·전투기 통계는 日本防衛廳 編, 「防衛白書, 1994」, (東京: 防衛廳, 1994), pp. 275, 283.

둘째, 한반도에서의 현상 변화가 역내 불안정요인으로 되어 각국의 국익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즉 한반도가 통일되어 역내 강대국으로 등장할 경우, 역내 역학관계의 변동을 우려한 각국이 정치·군사대국화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각국은 자국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면서 타국의 영향력 증대 구실로 작용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현상변경요인의 발생을 억제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일반론적인 소극적·부정적 입장과 달리 구소련의 신사고 외교정책이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최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듯이 러시아가 남북대화과정과 통일과정의 진전상황에 따라 여타 주변국가들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원·유도함으로써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아태정책의 전반적 애로를 타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국가임을 천명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문제에 매우 제한적인 발언권을 행사하여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자국의 역내 입지를 고양시키는 수단으로서 한반도에서의 정세 변동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을 위해 한반도의 정세 변동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가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또한 이를 통해 조성되는 한반도정세 변화를 이용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평화애호국가로서의 러시아의 국가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역내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한반도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대한반도 정책에 낮지 않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 안보회의에서 작성한 안보정책문서에서는 한반도가 독립된 章으로서 CIS, 동유럽, 서유럽,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sup>54)</sup> 코지레프 외무장관도 「콤포스카야 프라브다」지와 회견에서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면서, “러시아의 최대 외교파트너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이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다.<sup>55)</sup> 이처럼 한반도를 러시아 외교의 돌파구로서 활용하려는 인식은 앞에서 논급한 1992년 12월의 러시아의 외교정책문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 돌파구 논리가 한반도를 보는 러시아의 기본 인식인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한반도 통일에 대해 주변국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통일한국의 강대국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54) *Nezavisimaya gazeta*, 1993. 4. 29.

55) *Komsomol'skaya pravda*, 1992. 12. 5.

지적하지만, 동북아 역내 역학관계에 있어서 열세에 있는 러시아의 경우, 통일한국의 강대국화에 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가 현재 양극체제 붕괴후 21세기의 새로운 패권국가로서 등장하기 위해 미·중·일·유럽 등과 경쟁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현재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화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으나, 열세에 있는 러시아의 역내 지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통일과정을 활용하기 위해 통일한국의 강대국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덜 주목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즉 러시아는 통일한국이 러시아에 적어도 적대적인 세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통일한국이 강대국으로 될 잠재력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통일을 지원할 것이며, 통일한국이 러시아에 적대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과정에 관여하면서 충분히 획득 가능한 목표라고 인식할 것이다.

셋째, 이 경우는 여타 주변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인 데,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문제이다. 한반도의 통일여건이 성숙하여 그것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른다면,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통일한국과의 우호적인 유대관계를 미리부터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다.

넷째,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즉 한반도 통일이 초기단계에서는 남북한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에 의해 러시아에 대한 투자 감소를 초래할 것이나, 궁극적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증대되면서 괄목할 만한 대러시아 투자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과 러시아간의 경제관계가 확대되면서, 한반도가 러시아의 극동교두보로 되면서 마침내 러

시아는 유럽과 동북아를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sup>56)</sup>

또 다른 러시아 학자는 한반도의 통일로 말미암아 첫째, 남한으로의 러시아의 에너지·원료 수송이 원활해지고, 둘째, 한반도 전역에 대한 러시아의 수출이 증대되고, 셋째, 북한의 대러시아 부채 변제가 능성이 높아지고, 넷째, 두만강개발계획과 같은 다자적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57)</sup>

더욱이 최근에는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논지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미 하버드대학 에버스타트 교수는 남북통일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서두르는 것이 좋으며, 주변국들도 한반도 통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은 각각 안보·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한반도가 조기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나 통일한국은 주변국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존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주변국들은 통일한국이 어느 한 국가와 동맹을 구축할 경우 안보상에 큰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남북한이 통일되면 군사력의 대규모 감축이 이뤄지고 국제질서를 존중할 것이므로 잠재적 위협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통일한국은 남한의 선진화된 경제와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동아시아지역에 새로운 큰 시장을 창출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에게도 이롭다”고 강조했다.<sup>58)</sup>

56) Alexander Kislov, “Russia and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3, No. 4 (Winter 1992), pp. 538~539.

57) Andrei V. Kortunov, *op. cit.*, p. 23.

58) Nicholas Eberstadt, “Hastening Korean Reunification,” *Foreign Affairs*, Vol. 76, No. 2 (March/April 1997), pp. 77~92 참조. 에버스타트 교수는 독일 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엄청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점진적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견해가 많지만,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나

이와 같은 지적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미·일·중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더욱이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의 국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논리가 다양한 차원에서 개발되고 전파될수록 국제적 통일환경은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아갈 가능성은 많지 않으며, 남북한의 격차 심화로 통일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 IV. 점진적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남북간 이질화 심화, 급격한 통일시의 후유증 등을 감안할 때 통일 과정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구도에 입각한 통일방안을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한이 냉전구조의 산물인 적대와 불신관계를 청산하고 신뢰속에서 남북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협력을 활성화·제도화하는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단계를 의미한다. 남북연합 단계는 화해·협력 단계를 통하여 증진된 남북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1민족·2국가의 남북연합을 실현하여 사회·문화·경제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공동생활권을 구축하는 단계로서 「남북연합헌장」 또는 「민족공동체헌장」의 실천단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통일국가 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1민족·1국가의 단일국가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로서 「통일헌법」의 실천 단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통일구도는 남북대화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남북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 통일을 뜻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주변국의 역할은 화해·협력단계에 집중된다. 즉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화해·협력단계로의 진입과 남북한 경제·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주변국이 협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부터의 통일과정, 특히 남북연합 단계이후의 통일 과정은 남북당사자간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런 점에서 여기에서는 3단계 통일구도의 각 단계별 과정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을 논하기 보다는 영역별·기능별로 러시아가 어떤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본다.

### 1.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록 1992년 12월 발간된 러시아의 외교정책문서가 “북한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 아직도 전통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1993년 4월 4일 미·러 정상회담에서 엘친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듯이, 구소련 시대에 비하여 상당히 축소되고 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 후 북한과의 관계복원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다. 대규모의 정부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외교적 고립 탈피효과를 제공하는 등 김정일체제 유지를 지원하고,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쌍무적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화사정으로 무기수출이 현저하게 증대되지 않는 것이나 부품공급 차원을 넘는 무기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군 고위인사 교류와 합정 상호방문 등 통상적인 군사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비록 구소련시대에 비하여 축소되었지만 계속 견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의 모험주의적 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아·태정책 추진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여 북한의 개방·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의 외교·고립·경제난 탈피를 위한 대외관계 증대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역할을 용인하는 바탕위에서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을 촉구하고 미·북간 접근을 적극 지원·중재할 수 있는 틈새

를 파고드는 등 적극적인 중재역을 자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북한의 국제사회에의 편입을 적극 유도할 것이다. 우선 한반도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역내 다자간 안보·경제협력기구의 창설을 주장하고, 북한이 여기에 동참할 경우, 북한의 위협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주변국들에게 강조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다자기구에의 동참을 통해 체제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APEC과 ADB 등과 같은 역내 국제경제기구에의 가입을 적극 주장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주장은 러시아도 이들 기구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구에의 가입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러시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밑바탕에 깔고 강조될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러·북한 쌍무관계를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국제사회에의 편입을 유도할 것이다. 즉 러·북 군사동맹의 폐기와 새로운 쌍무관계조약, 그리고 경화결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로의 이행 등은 과거 구소련시대의 특수한 국제관계의 틀속에서 안주해 온 북한의 대외관계를 점차 현실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새로운 조약의 군사안보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59쪽 이하 참조).

신조약문제와 관련하여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러·북동맹 3조에 명기되어 있던 “양국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국제문제에 대하여 상호협의를 한다”는 협의조항의 존치여부이다. 러시아로서는 이 조항을 유지함으로써 이를 지렛대로 한반도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등 군사안보문제와 통일과정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

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가 국제문제 협의조항을 근거로 북한과의 협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문제 협의조항이 다소 문구상의 수정이 가해질지는 모르나 그런 취지의 규정이 신조약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 2.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협조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안정을 희망하고 있어 한반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평화체제로의 전환 방식, 특히 평화협정의 체결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의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외교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으로 러시아(구소련)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며, 휴전협정에 서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문제에 직접 관여할 국제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

둘째,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어, 남북한 쌍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러시아로서는 어느 일방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셋째,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령부 해체 등 휴전체제 대체과정에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은 동북아정세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과도 연계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남북한은 물론이거니와 미국과 중국 등 이해관련국들을 당장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1992년 11월 한·러 공동성명 제6항에서 “한반도 통일이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명하였지만, 이것을 한반도문제의 남북당사자해결원칙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러시아의 남북평화협정 체결 지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휴전협정 대체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명백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러시아는 한국전쟁의 실질적 배후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현재 한반도 정치·군사문제 해결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불만을 갖고 있으며,<sup>59)</sup> 이런 점에서 러시아가 배제된 평화체제 전환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또는 국제정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의 주장대로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를 준거로 하여 한반도 정치·군사실세가 재편성될 경우, 러시아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봉쇄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주장보다는 남한의 남북평화협정 체결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즉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남북한 쌍방에 대한 러시아의 우호관계를 활용하여 교섭과정 뿐만 아니라 국제적 보장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러시아는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또한 이를 통해 조성되는 한반도정세 변화를 이용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59) 이와 관련, 러시아의 한국전쟁 관련문서 공개를 통한 소련의 한국전쟁 개입사실 입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련·러시아의 전통적 영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평화에 호국가로서의 러시아의 국가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돌파구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적어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자로서 러시아가 적극 관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가 핵심의제로 될 4자회담에 자국이 배제된 것에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4자회담 지지를 천명하고 있으나, 이런 기본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에 러시아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고 또한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현재 남북한과의 군사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러-북 군사동맹조약 폐기통보 공식발표(95. 9. 7)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연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남한과는 현재 불가침조항을 포함한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군사문제에 있어서 일정한 발언력이 있으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리하여 4자회담이 궁극적으로 러시아를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남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과정에도 자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러시아는 보장조약형, 유엔보장형, 다자간 지역안전보장형, 교차불가침협정형 등 어떠한 형태의 국제적 보장이든 간에 우선 일차적으로 러시아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고,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미-중만에 의한 「2+2」 방식 등에는 반대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는 주변4국에 의한 보장조약 체결 또는 주변4국의 교차불가침조약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을 선호할 것이다. 다만 휴전협정 서명자로서의 마중의 직접적 관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주변4국에 의한 국제적 보장을 주장하기 어려울 경우, 러시아는 유엔보장형을 주장함으로써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유리한 입지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제도화를 위해서는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화되는 동시에, 남북간의 평화를 국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최근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하에 CIS 역내 분쟁지역에 러시아군을 파견하고 있는데, 군대의 파견은 당해국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영향력 행사·제고 수단이 된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주변4국 또는 유엔의 국제적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며, 러시아군이 한반도 평화유지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한반도의 전쟁상태가 종료되고 평화상태가 정착되면, 당연히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유엔사 해체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소련군의 북한 철수를 강조하는 등 원칙적 입장에서 철수를 주장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주한미군이 한·미간의 쌍무관계에 입각한 것으로서 휴전협정 존폐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인정할 것이다. 이는 과거 소련 시대와 달리 러시아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거부반응을 적게 느끼고 있고, 주한미군 문제로 인하여 미국 및

한국의 반발을 촉발시킬 이유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주한미군 철수가 일본의 재무장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0)</sup>

### 3. 남북대화 중재

러시아는 남북대화의 중재역할을 자임할 수 있다. 작게는 남북문화·학술행사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중재의 범위와 내용이 다양할 수 있다.<sup>61)</sup> 특히 경제·군사분야에서의 남북대화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쌍방과의 관계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발전은 앞서 언급한 「돌파구 개념」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한국과의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 관계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과의 군사협력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중국 및 일본과의 군사협력과 연계되어 군사강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지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무기수출·기술이전을 통해 러시아에게 경제적 실리를 제공한다.

즉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수단은 남북한에 대한 쌍무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양자주의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국제회

60) 이와 관련 코언 미 국방장관은 1997년 4월 5일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주한미군을 비롯하여 10만명 수준의 아시아 전진배치병력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조선일보」, 1997년 4월 6일.

61) 예컨대 사회·문화분야에서는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채택하기 전까지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남북간 직접교류방식 보다는 제3국에서의 간접교류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러시아 연해변강에 「남북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할 경우, 러시아가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도 남북대표를 초청하는 각종 학술·문화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러시아에서의 남북간 체육교류·협력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의 소집 주장 등 다자주의로 대별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양자적·다자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한반도정책을 적극화·본격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남북대화를 증대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자국의 역할과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sup>62)</sup>

또한 러시아는 남북대화의 직접 중재 뿐만 아니라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한 남북대화 중재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예컨대 잠수함사건이 나자 유엔을 포함한 7자회담 개척을 제의하였듯이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간단없이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조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의 북한 참여와 한국이 1994년 7월 제창한 「동북아안보대화」(NEASED) 개척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sup>63)</sup> 이와 함께 KEDO에 대한 저비용의 참여도 적극 모색·추진할 것이다. 4자회담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4자회담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4자회담이 궁극적으로 러시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만일 4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러시아가 주장해 온 다자주의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앞으로도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 러시아가 계속 관여하고 있고

- 
- 62) 러시아는 역내 역학관계에서의 열세로 인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이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과 미국과 중국 등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발휘되고 신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문제의 다자주의적 접근과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남북 대화와 다자주의를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이라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불리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 63) NEACD는 1993년 10월 미 국무부 지원하에 샌디에고대학 주최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1996년 1월 북경회의까지 5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한·미·일·중·러 5개국의 학자와 정부 관료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민간·비정부 차원의 회의이지만 동북아지역내 유일한 안보대화채널이다. 아직까지는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역내 국가간 안보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증진 필요성을 역설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은 1993년 7월 준비회의 참석후 현재까지 본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한편 NEASED는 1994년 7월 제1차 ASEAN-ARF에서 한국측이 제안한 것으로 동북아 6개국 정부간 안보대화채널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끊임없이 환기시킬 것이다.

남북한에 대한 쌍무관계 강화는 궁극적으로 한반도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실천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이상과 같은 남북대화 중재정책들이 설령 실효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러시아가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안·중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쌍방에 대해 공히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만으로도 러시아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4. 남북경협 중재

러시아는 남북한과의 동시수교국으로서 극동시베리아를 매개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러시아를 매개로 한 남북경협은 한국의 자본·기술, 러시아의 자원, 북한의 노동력을 이상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며, 북한의 경제개방·개혁을 유도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노동력은 그 동안 시베리아에서 벌목, 건설, 농업 등 제반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노동의 질도 비교적 잘 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는 1994년 초 러시아 외무부를 통해 남북한과 러시아간의 3각협력이 가능한 사업분야를 제시한 바 있고, 1995년 9월 체르노미르딘 총리의 한국 방문시에는 3각협력을 공식 제안하기도 하였다. 3각협력이 가능한 사업분야로는 대외무역화물을 철도차량에서 화물선으로 환적하기 위한 북한 나진항구의 이용, 제철·화학기업, 탄광·조선·선박수리기업, 섬유·경공업기업 등의 현대화사업, 농수산물의 생산, 약초재배, 치료센터 건설, 관광을 위한 토지·경작지·해안지역 임대 등을

들 수 있다.<sup>64)</sup>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65)</sup>

①농업협력: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농업기술을 접합하여 아무르, 하바롭스크, 연해변강 등지에서 곡물 및 채소류를 경작·가공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러시아와 북한에 공급한다.

②임업협력: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목재가공기술 및 기계, 러시아의 자원을 결합하여 야쿠찌야, 마가단, 아무르, 하바롭스크 등지의 목재를 벌채·가공하고, 이를 일본과 한국 등 아·태지역에 수출한다.

③어업협력: 러시아와 한국의 선박과 가공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접합하여 극동지역 러시아 경제수역 및 공해상에서 공동조업하고 수산물을 가공한다.

④석탄개발협력: 한국의 유휴채탄설비와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쿠즈바스, 야쿠찌야, 연해변강, 하바롭스크 등지의 석탄을 개발하여, 극동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남북한에 공급하고 제3국에 수출한다.

⑤에너지자원 개발협력: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재정지원 및 설비와 접합하여 극동지역의 가스·석유를 개발하고, 이를 한국과 일본에 공급한다. 중장기적으로 남북한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

⑥철광개발협력: 야쿠찌야, 마가단, 하바롭스크, 연해변강 등지의 철광 및 비철광석을 개발하고 광산물을 가공한다.

⑦소비재생산협력: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재정지원을 결합하여 극동지역에서 소비재를 생산하여 러시아와 북한지역에 공급하고 세계시장에도 수출한다.

---

64) M. L. 티타렌코, "극동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러·한관계: 러시아측 관점," 「중소연구」,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p. 289.

65) 모스크바 무역관, "한국, 북한, 러시아 3각협력 가능성 모색," 「북방통상정보」, 1994. 1, pp. 128~30; 여인곤,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추진방향」,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03 (1994. 9) 참조.

⑧러시아 기업현대화 협력: 한국의 재정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및 건축자재를 결합하여, 비철금속, 기계공업, 경공업, 건축자재 생산기업의 현대화에 참여한다.

⑨북한내 기업현대화 협력: 구소련 기업이 제공하던 기술을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이 재정·설비를 지원한다. 특히 비철 금속, 조선, 열차 및 운송기기, 건축자재, 경공업, 선박수리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한국의 원·부자재 수출과 러시아 및 제3국 수출을 통해 북한의 경공업 가동율을 고양한다.

⑩건설협력: 북한의 노동력과 건축자재, 한국의 재정지원 및 설비를 접합하여 북한의 대러시아 부채상환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⑪한반도 종단철도 재건 및 공동운영: 한국의 재정지원과 러시아의 기관차, 수송기기를 접합한다.

⑫두만강계획과 연계한 전세계 교통요충지 건설

3각협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불명확하나 구체적으로 실리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일 경우, 체제위협요인이 최소화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sup>66)</sup> 적어도 한·러·북한간 3각협력은 러시아 극동지역 또는 두만강경제특구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체제위협 효과를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평양에 유리한 방향으로 3각협력을 추진할 경우, 북한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3각협력에 참여할

66) 1996년 3월 18일 러시아주재 북한대사관 광명일 경제담당공사는 러시아하원 지정학문제위원회의 「야쿠찌야, 북한, 한국 가스공급계획안, 청문회에서 사하 가스전 공동 개발에 대한 체르노미르딘 총리, 김우중 대우회장, 김달현 북한 부총리간의 의정서 서명(92. 6)이 현재에도 유효하며, 또한 북한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혀 가스관의 북한 통과에 찬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1996년 5월 6일 이그나텐코 부총리는 공로명 외무장관과의 면담에서 1996년 4월 이그나텐코 방북시 러시아측이 구소련이 건설한 북한 공장의 현대화사업을 3각협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가 앞으로도 3각협력의 성사를 위해 한국과 북한의 반응을 타진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3각협력이 러시아에 경제적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증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한반도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증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이 실행단계로 들어갈 경우에는 3각협력이 매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TRADP는 현재 개발방식을 둘러싼 관련국간의 대립으로 계획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나, 중국 훈춘과 러시아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과 자루비노 항만확충사업이 중·러간 협력과 일본의 자본 참여로 구체화되고 있다. TRADP는 남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역내 다자간 경제협력으로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러시아를 중개로 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적극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현재 북한내 소련제 설비로 건설된 공장의 재가동 등 적극적인 러·북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러시아가 이른바 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정기간동안 특정 공장·지역을 임대하여 인프라를 조성·건설하고 가동하다가 북한측에 양도하는 방식인데, 중국에 의해서도 모색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통일이후에도 통일한국과의 협상에서 이들 공장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 북한지역에 대한 영향력으로 연계시키려 할 것이다. 특히 임차기간중에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한국 정부는 나호트카한국공단(100만평)에 대한 50년 임차계약 등

의 선례를 감안할 때, 러시아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통일한국과의 경제적 유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 5. 한반도 군비통제 유도

러시아는 특히 1996년 이후 무기·방산물자를 통한 대한 경험차관 상환으로 한국과 군사관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았다. 1996년 11월 「한·러 군사기술·방산 및 군수협력협정」이 체결되고, T-80U 전차, BMP-III 장갑차, METIS-M 대전차유도탄, IGLA 지대공 미사일 등 1억 9,770만 달러 상당의 러시아제 무기가 도입되고, 이들 장비로 무장한 기계화대대가 육군에 창설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과도 군사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가 계속 강조하여 왔듯이 러시아의 대북한 무기공급은 중단된 것으로 보이나,<sup>67)</sup> 부품공급·장비유지 차원의 교류·협력은 적은 규모이나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97년 5월 19일 「러시아방송」은 러시아 국방부 국제군사협력총국장 레오니드 이바초프 중장의 말을 인용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모스크바는 평양과 군사기술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 소련에 의해 북한에 제공된 무기의 부속품 공급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sup>68)</sup>

67) 1987~1991년간 구소련의 대북한 무기수출은 42억 1,700만 달러(1990년 가격)이었다고 한다. *SIPRI Yearbook, 1992*, pp. 311~314.

68) “북·러간 무기거래 관계 유지,” 「내외통신」, 제10608호 (1997. 5. 20, 1편). 북한은 러시아내 친북단체를 통해 러시아의 대북 무기제공 여론을 조성하여 왔다. 「모스크바방송」, 1995. 5. 25; “러시아내 대북무기제공 여론조성,” 「내외통신」, 제9517호 (1995. 5. 26, 2편). 이에 따라 심지어 북한이 구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 기술진의 도움으로 MIG-29를 조립·생산하여 왔으나, 최근 러시아로부터의 MI-26 대형헬기 도입과 MIG-29 전투기의 추가 조립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제난 속에서도 증강되는 군사력,” 「내외통신」, 주간판 제1010호 (1996. 6. 20).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폐기된 러·북 동맹조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약의 내용속에 군사협력조항을 포함시킬 가능성도 크다. 즉 구소련 국가들 이외에는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폐기는 분명하지만, 군사안보에 대한 규정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느냐가 주목되고 있다.<sup>69)</sup>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를 감안할 때, 러시아는 북한과 최소한의 군사안보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즉 첫째, 한반도 내부정세로서 한·미 군사동맹조약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한 동맹조약을 전면 파기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러·북 쌍무관계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이 손상된다. 특히 중·북 군사동맹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북 군사협력마저 단절된다면 러시아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 셋째, 동북아 및 한반도 차원의 다자간 안보체제 수립의 경우에도 러시아의 대북한 군사관계 유지가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러시아 의회내 친북한 보수파가 여전히 강력하다.

특히 앞서 언급하였듯이 실제로도 러·북간의 군사교류가 최근 점차 복원되고 있어 러·북간 신조약에 군사교류·협력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카라신 외무차관이 1997년 1월 평양방문후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러·북간 새 조약에 군사기술협력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던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즉 카라신 차관은 러·북간 군사기술협력이 “러시아의 국제적 의무에 모순되지 않으며 지역내 세력균형을 허물지 않는 방향에서

69) 러시아는 일반적으로 구소련이 체결한 조약협정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몽골과 인도 등과도 군사면을 배제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루어질 것이며, ... 무기·부품 공급, 군사대표단 교환 등을 포괄한다”고 말했다.<sup>70)</sup> 더욱이 로지오노프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97. 4. 15)한 것도 이와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sup>71)</sup>

결국 러·북 군사교류·협력은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전방위 강대국외교」와 합치되는 것으로서 문제는 얼마만큼 「저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안보관계를 설정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군사·안보관련 규정이 채택된다고 하여도 적어도 그것이 한반도의 군사정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단지 러시아와 북한에게 상징적 의미를 주는 차원에 한정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신조약에 군사·안보 관련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교류·협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아야 하며, 러시아는 북한과 신조약과는 별도로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러시아는 남북한 쌍방과 공히 군사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군사문제와 관련한 한반도문제 처리과정에 여타 주변국과 구별되는 지위를 요구하고 향유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즉 러시아는 한반도 군사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주장할 것이며, 특히 한반도 군비통제문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 군비통제가 한

70) “카라신, 북한과의 군사협력 가능성 밝혀,” 「내외통신」, 제10452호 (1997. 2. 4, 2편).

71) 로지오노프 장관의 이 발언(중국 군사과학원에서의 연설)은 러·북 군사동맹을 상기시킨다기 보다는 적어도 러시아가 한반도 전쟁발발시 방관만 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남북한과의 군사적 연계 속에서 한반도 군사·안보문제에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내의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인 군비통제와 연계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 추세에 제동을 거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sup>72)</sup>

그러나 실제로 한반도 군비통제과정에서 러시아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을 것이다. 미·북관계가 악화될 경우에는 러시아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의 한반도 주변정세 발전구도에서는 미국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남북한과의 군사교류·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내에서의 자국의 군사적 지위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군사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군사훈련에 남북한의 참관단을 초청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만을 단독으로 초청하기 어려우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함께 초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러시아를 매개로 한 남북한간의 군사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할 것이다.

---

72)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 체계 설립을 통하여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이래로 계속하여 아시아지역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왔다. 러시아는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유럽의 평화·긴장완화·신뢰구축·군비통제 등의 안전과 경제·과학기술·문화·인도주의·인권 등의 협력을 증진하는 기틀로 작용하였는데, 아시아에서도 이를 모델로 한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협력을 모색·증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창설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평가된다. 즉 러시아의 역내 발언권이 매우 제한적이고 이를 증대시킬 수 있는 외교적 수단도 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를 창설·주도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역내 문제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국제무대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역내 다자협력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도 이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남북한 군비통제과정의 공정한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다. 이리하여 남북한 특히 북한측이 이에 대해 공감하게 될 경우, 남북한과 공히 군사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의 중재역할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그 틈새를 비집고 중재역을 자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 러시아는 본격적인 남북간 중재자로서의 전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상황의 발생을 위해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관여를 계속하고자 할 것이다.

한편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처럼 미-북간 협상구도로만 진행되고 있는 문제해결의 틀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보는 러시아의 기본 관점은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되며, 둘째,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필요하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이 미국의 주도하에 러시아를 배제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다자주의적 국제협조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이 기본적인 정책기조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다자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자국의 경수로 기술과 신포관련 축적자료를 배경으로 KEDO에서 최소한의 비용분담으로 최대한의 역할 수행을 추구할 것이나, KEDO에서 러시아가 구체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편 미-북간 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구도가 깨지거나 특별사찰문제가 거론되어 북한이 특별사찰을 거부할 경우, 러시아는 변화된 상황속에서 다자주의적 접근을 재차 강조하거나 가능하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역할을 자임할 수 있을 것이다.

## 6. 통일협상 중재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과정에 적극 관여하고 한반도 통일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이 실현될 경우,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성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과정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통일 실현에 기여하게 되면, 분단해소에 기여한 평화국가로서의 이미지가 고양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돌파구를 확보할 수 있다. 즉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과정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통일 실현에 기여하게 되면, 구소련은 미국과 함께 분단의 책임이 있었지만, 구소련의 계승국으로서 러시아는 분단을 해소한 대조적 이미지를 얻게 된다. 이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따라 더욱 대비될 수도 있다. 또한 이것은 소련방 해체, 독일통일 등 냉전 종결에 공헌하여 온 러시아의 평화이미지와 상합되어, 러시아가 향후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자산으로 작용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로 인한 한반도정세의 안정 그 자체는 러시아극동지역 주변정세의 안정이라는 점에서 극동개발의 중요한 외적 환경이 된다.

둘째, 러시아의 경제적 실리이다.<sup>73)</sup> 통일과정에는 러·북간 쌍무 협력 또는 한·러·북 3각협력을 통해 북한경제에 관여하고, 통일이후에는 통일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지역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등 공

---

73) 한반도 통일에 따른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Alexander Kislov, "Russia and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3, No. 4 (Winter 1992), pp. 538~539; Andrei V. Kortunov, "The Northeast Asia Policy of Russia in the 21st Century,"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Korea's Security Strategy*, cohos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June 9~10, 1997, Seoul, Korea, p. 23 참조.

동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 특히 시베리아철도가 부산항까지 연결됨으로써 남한의 유럽 수출물동량을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에너지·원료 및 상품 수출이 원활해진다. 명실공히 한반도가 러시아의 극동가교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통일이 후에는 한·러·북간의 3각협력이 아니라 한국의 자본·기술·노동력이 러시아 시베리아개발에 직접 쌍무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으므로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협력 전망도 매우 밝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최대 채권국가로서 러시아는 43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러시아 외채를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sup>74)</sup>

셋째, 脣齒關係로 설명되어 온 한국과 중국간의 전통적 관계의 단절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 통일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상실을 의미하며, 통일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중국과 북한간의 혈맹 또는 과거 19세기이전 중국과 조선과의 전통적 유대관계처럼 복원될 수는 없을 것이다. 중·북관계에 비해 통일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소원화는 러시아의 국익으로 반영될 수 있다.

넷째, 통일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패권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74) 북한의 대러시아 외채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소련방 해체직전 북한은 22억 3,400만 루블(39억 4,700만 달러)의 대소채무를 갖고 있었으나, 신생 러시아가 출범하면서 급격한 인플레이로 루블화 평가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1992년 쌍방은 북한의 대러 채무액을 루블화의 평가절하를 고려하여 32억 루블로 하되, 신용차관 17억 루블과 무역채무 15억 루블로 구분하기로 합의하였다. *Izvestiya*, 1993. 5. 20. 그 후 자료에 따라서는 루블화 평가방식이 차이가 있고 실제로 외채규모도 늘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러시아 외채규모가 38억 루블(정부차관 32억 루블, 상품미수대금 6억 루블)로 평가되기도 한다. 본문의 인용수치는 통일원이 1996년 5월 17일 공표한 것이다. 통일원은 북한의 외채총액이 1995년말 현재 115억 1천만 달러인데, 러시아 43억 2천만 달러, 중국 21억 9천만 달러, 서방채권은행단 23억 3천만 달러, 일본 9억 1천만 달러, 기타 서방국가 17억 6천만 달러라고 발표하고, 1994년 북한의 GNP가 212억 달러였고 1995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외채총액은 GNP의 50%를 훨씬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된다. 한반도 주변국 특히 중국과 일본은 통일한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려하는 동시에 통일한국이 다른 경쟁국과 동맹 또는 연합관계를 맺는 것을 견제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중국과 일본간의 역학관계를 균형짓는 추로서 기능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중일의 패권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역내 역학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역내 다자안보협력이 적극 추진될 수 있다.<sup>75)</sup>

다섯째, 미국의 영향력도 견제할 수 있다. 「1+3 체제」하에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sup>76)</sup> 미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따라서 통일한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견지하고 있을 것이나, 러시아와 통일한국의 관계 긴밀화는 상대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여섯째,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다른 국가에 대한 견제와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인해 러시아가 다시 강대국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따라서 러시아는 남북관계가 교류·협력단계에 진입하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실현을 위한 여러

75) 통일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새로운 관계(modus vivendi) 설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나, 어느 한 쪽을 편들어 다른 한 쪽에 대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이다. 더욱이 통일한국은 일·중 대립 또는 일·중 공동지배의 상황을 모두 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가지 경우 모두 한반도가 주된 활동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이와 같은 곤경을 회피하기 위해 다자안보협력을 적극 모색·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정책목표와 합치될 수 있다. Andrei V. Kortunov, "The Northeast Asia Policy of Russia in the 21st Century," p. 22.

76) 특정국의 패권체제나 세력균형체제는 첫째, 한반도에서의 현상변경 즉 통일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둘째, 한반도가 통일되었다고 하여도 통일한국이 국력을 신장하기에는 제약요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 패권체제나 세력균형체제는 광범위한 체제로서 패권국 또는 세력균형국의 용인없이 현상변경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실현은 현상변경이 가능한 유동적인 「1+3 체제」에서 가능할 것이다. 「1+3체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강원식, 「통일한국의 등장에 따른 동북아 안보구조 변화 대응책」,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27 (1994. 12) 참조.

가지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한반도 통일문제를 주제로 하는 학술회의를 모스크바와 극동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에서부터 한반도문제 논의를 의제로 하는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의 창설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통일 실현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중재로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러시아로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반도 통일과정을 아태정책 추진의 돌파구로서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통일과정이 무르익어 「사실상의 통일상태」가 되어 버리면 다른 주변국가들도 한반도의 통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타 국가들도 먼저 한반도 통일실현을 위한 선제성 제안을 내놓을 것이며, 또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과 노력을 끊임없이 내보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소극적인 반응까지도 설득하고 위무하는 작업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실질적인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가 역할을 맡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여도 사실상 러시아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가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처럼 주변국에 대한 설득과 적극적인 통일지지 천명 등 통일분위기 조성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보다 가시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통일한국은 물론 주변국들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과 기여가 컸음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V. 북한 급변사태에서 러시아의 역할

### 1. 북한 급변사태 전개과정에서의 역할

북한의 대내외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체제위기가 심화되어 이미 붕괴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견해에서부터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sup>77)</sup> 그러나 국내에서의 평가와 전망은 대체로 김정일을 중심으로 권력지도부가 잘 결속되어 있으며 주민에 대한 정치·사회적 통제도 비교적 잘 작동되고 있어 주민 불만이 조직적으로 표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김정일정권이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78)</sup>

한편 북한 경제가 만성적인 식량부족 및 수재로 식량난을 겪고 있

77) 미국의 경우, 조기붕괴설은 주로 미국방부, 정보기관, 의회 강경파들 가운데 제기되고 있다. 1996년 2월 22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의 John Deutch 중앙정보국 국장과 Patrick M. Hughes 국방정보국 국장의 발언, Ezra Vogel 전 중앙정보국 동아시아 정보담당관(현 하바드대학 교수)의 기고(*Los Angeles Times*, Feb. 12, 1996; *Washington Post*, April 6, 1996), William S. Cohen 미 국방장관의 국방보고서(QDR) 브리핑(1997. 5. 19) 참조. 미국 학계의 주장으로는 랜드연구소·닉슨자유평화센터·하바드대 과학국제관계센터의 공동연구보고서 「미국의 국익」(『중앙일보』, 1996. 7. 18) 등 참조. 한편 조기붕괴설에 대한 반론은 주로 미 국무부쪽에서 나오고 있다. 1996년 3월 19일 미 하원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의 Winston Lord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발언, Donald Greg 전 주한미국대사(현 Korea Society 회장)의 기고(『중앙일보』, 1996. 3. 21), Robert Gallucci 전 미·북협상 미국대표의 발언(『조선일보』, 1996. 5. 24), Larry A. Niksch 미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의 한국 국방대학원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U. 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Collapse Theory and Its Influence,” 1996. 8. 22) 참조.

78)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는 15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북한체제의 위기수준을 평가하였는데, 1992년에 이미 북한이 체제위기의 임계점을 넘었으나, 현재 붕괴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며, 아직도 관리 가능한 상황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북한 당국이 현재의 위기수준 증가추세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2001~2008년 사이에 체제변혁이 예상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6-23 (민족통일연구원, 1996.12).

지만 대규모 기아사태와 이로 인한 식량폭동 등이 유발될 징후는 아직 없으며, 북한 당국도 식량확보를 위한 대외교섭에서 아직 느긋한 대응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들의 최소 생계수준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은 대남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대내적 위기의 원인을 남한에 전가함으로써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불만요인의 표출을 억제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김정일 정권 지지,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진전 등 대외환경도 체제유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위기가 엄존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체제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식량폭동 등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지적으로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진압과정에서 민중봉기가 대대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김정일 정권에 불만을 품은 권력핵심부내 엘리트들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역으로 친김정일파에 의한 친위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로써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으며, 더욱이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고립이 가중될 경우, 대북 연착륙정책 추진자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북한 정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대남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러시아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현재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고 주도면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입안과 결정이 비교적 소수의 한반도관련 전문가집단내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변사태 발생시 예상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종합적으로 상정한 바탕위에

서 사전대비책을 마련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급변사태의 각 상황에서 러시아가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단지 지금까지 분석해온 러시아의 한반도정책목표, 정책추진행태,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탕위에서 당해 급변사태하의 한반도상황을 접목하여 예상되는 러시아의 대응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 가. 대규모 민중봉기·주민학살시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김정일 정권이 폭력을 사용할 경우, 러시아는 우선 이를 사실보다도 하고 내정불간섭을 표방하면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정도의 성명을 발표하고 관망자세를 취할 것이다. 내정불간섭의 표방은 북한 급변사태에 러시아가 개입할지 모른다는 여타 주변국을 의식한 조치일 것이며, 관망자세는 민중봉기의 성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정권의 과도한 대응으로 인해 민중세력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인권차원의 경고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 정권이 선무공작의 차원에서 정권의 이름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할 식량과 의약품의 지원을 주변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러시아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중국도 적어도 러시아보다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형식적 수준의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중봉기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방식에 대한 지지를 요청받을 경우, 러시아는 가능한 한 북한 정권의 비위를 건들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언급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평양주재 대사관의 공식적 정보채널은 물론 비밀정보원을 북한측에 밀파하여 급변사태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전망할 것이다. 그 결과 민중봉기가 대대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고 더욱이 그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경우, 러시아는 공식·비공식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이중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공식적 차원에서 러시아는 첫째,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면서 동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둘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민중봉기세력에 대한 긴급 식량의료 지원을 천명한다. 이 경우 러시아는 북한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여타 국가보다 먼저 이와 같은 지원을 천명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비공식적 차원에서는 첫째, 북한내 밀파된 러시아 정보원을 통해 민중봉기세력과 접촉하고 필요한 간접지원을 약속한다. 직접 지원은 북한정권 뿐만 아니라 여타 주변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때 남한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관여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남한측에 대해 북한 민중세력과의 중개역할을 제의한다.

즉 민중세력과 연계를 가짐으로써 북한 급변사태 전개과정 자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민중세력이 북한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경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중재역을 맡음으로써 차후의 통일과정에서 유사한 역할을 맡을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역할은 북한과 여타 주변국과의 관계에 비추어 다른 국가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경우 북한 정권과의 정치적 유대관계로 인해 민중세력과의 비밀접촉에 한계가 있을 것이며, 미·일의 경우 이와 같

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미·북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물론 미국이 이와 같은 역할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 미국은 남북간의 중재역보다는 직접 북한사태를 관리하려 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가 만일 북한내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중국이나 미국에 기선을 빼앗기는 상황에 빠지면, 러시아는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간 회의 소집을 제안할 것이다.

#### 나. 쿠데타로 인한 정권교체

김정일 권력승계 구축과정에서 불이익을 보거나 소외당한 反김정일 軍部勢力이 조직화되어 김정일 정권 전복을 목표로 군부쿠데타를 일으킬 경우, 러시아는 사실보도를 하되 내정불간섭을 표방하고 관망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의 불만고조를 사전 차단하는 차원에서 김정일 측근이 親衛쿠데타를 일으키고 새로운 강경보수정권이 수립될 경우, 러시아는 이를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존의 대북 정책기조에 입각한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반김정일 쿠데타가 진압될 경우, 러시아는 북한과의 기존관계를 그대로 지속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나, 쿠데타가 성공하고 새로운 개혁정권이 출범할 경우, 러시아는 이를 즉각 승인하고 경제지원 등을 약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 신정권은 정통성 확보차원에서 남북대화과 미·북관계개선을 진전시킬 것이므로 러시아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러시아가 쿠데타 발발 이전부터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쿠데타 발생과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고, 따라

서 쿠데타 발생 당초부터 쿠데타세력을 지원한다면, 그 후 러시아의 영향력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다. 북한 내전 발생시

북한에서의 내전발발은 동북아정세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태이다. 러시아로서는 첫째, 내전이 확산되어 러시아 극동지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둘째, 내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셋째, 북한 내전과 같은 역내 불안정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제창하고 북한 내전에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다자협력을 주도한다는 목표를 설정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민주봉기가 확산되거나 쿠데타군과 정부군간의 충돌이 격화되어 내전으로 비화되면, 러시아는 첫째, 공식적으로 내정불간섭을 표방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 국경지역의 방비를 강화하여 북한탈출난민이 대거 유입되고 러시아 마피아가 허가없이 북한의 내전 일방과 연계하여 무기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통제하고자 할 것이다. 셋째, 내전으로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돕기위해 식량·의료구호를 실시하고, 이를 명분으로 러시아 정보원 등을 내전지역에 투입한다. 넷째, 비밀리에 내전 당사자와의 연계를 모색한다. 다섯째, 내전 종식을 위한 조정자·중재자적 역할을 자임한다.

러시아가 내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설령 지원요청이 없더라도 러시아가 자청하여 쌍방에 접근하여 무기·탄약 등의 공급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에서는 특히 구소련제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러시아의 역

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지원이 비밀리에 진행될 것이나,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전투력에 비추어 보아 대충 알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지원은 내전과정은 물론 내전종결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러시아가 내전당사자 쌍방 모두를 지원하였을 경우 러시아가 어느 일방을 지원하고 그 일방이 승리한 경우보다는 못할 것이나, 대체로 내전종식후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어느 일방을 지원하고 그 일방이 패배한 경우,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내전 조정자·중재자적 역할이 만일 효과를 발휘할 경우, 내전종결후의 복구과정은 물론 그 후의 제반 한반도문제 처리과정에서도 러시아는 최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러시아의 정책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통해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북한의 내전상황을 활용하여 역내에서의 자국 입지를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북한간의 쌍무관계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과의 다자관계속에서의 입지 확보가 필요한 데, 러시아는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지속적으로 모색·주도하고자 할 것이다. 즉 내전과정에서는 북한주민 지원을 위한 국제콘소시움을 제창하고, 내전종식후에는 복구를 위한 국제콘소시움 구성을 주장할 것이며, 북한 내전과정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을 바탕으로 이들 국제콘소시움을 주도하고 이것이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라. 대남 무력도발시

북한의 체제위기가 심화될 경우 북한은 내부적 불안정의 탈출구로서 외부긴장을 조성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20만 대군을 보유한 북한군은 명백히 위협적인 존재이지만,<sup>79)</sup> 러시아는 북한이 현재 한국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력통일에 나설 경우, 한·미 양국의 군사반격을 받아 북한이 파국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sup>80)</sup>

따라서 최근 중국을 방문한 로디오노프 국방장관이 한반도 전쟁때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97. 4. 15)하였으나, 한반도전쟁 발발시 러시아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패배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쟁에 원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북한에 대한 지원이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디오노프의 말처럼 러시아는 한반도전쟁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하고자 할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즉각 중재를 자청할 것이다. 북한은 전쟁수행을 위해 주력장비인 러시아제 무기의 부품공급을 러시아측에 요구할 것이고, 러시아는 이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명분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 경우 통상적인 수출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소량의 무기·부품이 공급될 수는

79) 최근 미국 군비통계국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는 현재 북한의 군 병력이 120만명이며, 이를 인구 1천명당 병력 수로 비교하면 53명으로 세계 1위라고 밝혔다. 즉 인구대비에서 2위인 이스라엘(36.8명)과 3위인 시리아(28.5)와의 격차가 많으며, 전체병력수에 있어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인구대비 병력수 세계1위: 북한 군사력 현황,」 「내외통신」, 주간판 제958호 (1995. 6. 22).

80) *Izvestiya*, 1996. 4. 9.

있을 것이다. 아 물론 이 문제는 북한 내전의 경우와는 달리 한·미 연합군 그리고 미·일 방위협력에 따라 후방지원을 담당할 일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각별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결코 지는 전쟁에 휘말려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중재 뿐일 것이다. 즉 외교적 중재를 통해 전쟁종결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한·미·일과 북한의 대결에서 중재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중국보다는 오히려 러시아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중재를 필요로 할 수 있을 것이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고 한반도 통일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울 것이므로 러시아의 중재역할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원한다고 해도 한국과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중재는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재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는 중국이 개입하여 한반도를 무대로 미·중간의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와 미국이 국내사정으로 한반도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만일의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경우는 모두 그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전쟁이라는 엄청난 정세변동요인에 대해 방관만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오히려 처음부터 북한을 지원하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편을 들어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력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 마. 대량난민 발생시

급변사태 발생시 체제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대규모로 북한을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민중봉기 또는 쿠데타로 인한 내전 발발 등 북한의 급변사태가 조기에 종결되기 보다는 장기화될 수록, 그리고 북한 내부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심화될수록 주변국가로 탈출하는 난민·망명자의 數는 더욱 증가될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로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도 적지 않을 것인 바, 러시아의 대응방향이 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sup>81)</sup>

일반적으로 난민은 수용국의 실업과 범죄문제 등 사회·경제적 혼란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수용국과 당해 난민발생국간의 외교적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각 국가들은 난민 수용을 회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러시아도 사실상 북한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에도 비록 소수이지만 탈북주민이 러시아 영내로 들어오는 경우, 러시아가 정식 외교절차를 통해 탈북자를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등 원칙적으로 관용정책(policy of tolerance)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에 대해 난민지위 또는 영주권 부여와 같은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가 북한과 1957년 체결한 「사법공조협정」에 의거하여 북한으로 송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82)</sup>

81) 1997년 4월 25일 러시아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현재 극동지역에는 하바롭스크변강의 벌목공 6,000여명, 연해변강의 블라디보스토크 건설대표부 노동자 3,000여명, 아르츰시 농업대표부 노동자 1,500여명 등 총 13,000여명의 북한인이 체재하고 있다. 러시아당국은 북한인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인에 의한 범죄가 1995년 75건(살인 1, 불법무기 반입 1, 출입국위반 54), 1996년 52건(살인 2, 마약 6, 출입국위반 26)이 발생하였는데, 그 가운데 마약범죄는 모두 북한인에 의해 자행되어 러시아 수사당국이 북한인 14명을 체포하고 아편과 헤로인 약 40kg을 압수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당국은 북한측이 개설한 임업·농업·건설대표부의 동태를 감시하는 한편, 「러·북 시민상호방문에 관한 협정」을 체결(97. 1. 24, 발효 5. 24)하고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 이외에는 러시아측 비자를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는 러시아로의 탈북루트를 앞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82) Amnesty Internationa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Russian*

그러나 대량난민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경봉쇄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첫째, 대량난민이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미칠 악영향과 둘째, 국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난민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비인도적 처사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과의 외교관계에서 복잡미묘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 전개상황과 남한의 대응에 따라서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즉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급변사태 초기에는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나, 만일 급변사태가 확대되어 북한 정권이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러 북한 정권이 위태로운 상황에 도달하고, 남한측이 인도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난민 수용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약속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평화애호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변사태후 전개될 새로운 한반도상황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렛대로서 난민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탈출난민을 인권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호하고, 「난민협약」(1951)과 「난민의정서」(1967)의 체약국(러시아는 1993. 10 가입)으로서 체약국의 의무인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추방 금지, 국경에서의 입국거부 금지, 무허가 입국에 따른 처벌 금지, 국제관례상의 기본적인 인권존중 및 표준처우 확대, 난민지위의 결정 등을 준수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주민의 러시아 입국루트는 3가지로 상정할 수 있다. 두만강

---

*Federation: Pursuit, Intimidation and Abuse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Workers*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1996), pp. 13~15.

국경을 통해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해상을 통하여 연해변강으로 입경하는 경우, 중국으로 월경한 사람들이 러시아측으로 다시 넘어가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중국을 통한 입국은 중국이 북한탈출주민에 대해 불리한 정책을 취할 경우, 마치 만주국 수립이후 많은 독립군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동하였듯이, 이를 피하기 위해 재차 러시아행을 결행하는 경우일 것이다. 러시아는 두만강국경을 폐쇄할 수는 있을 것이나, 중·러국경과 해상통로를 폐쇄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북한에서 급변사태 발생시 러시아로 월경하는 북한탈출주민의 숫자는 적지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국경지역에 대한 경제태세를 강화하고 해상·육상 통로를 봉쇄할 것이다.<sup>83)</sup> 이를 통해 난민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려 할 것이며, 이미 유입된 난민에 대해서는 수용시설을 설치하여 수용하기 보다는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러시아가 구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둘째, 재정확보를 위해 남한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즉 난민유입을 억제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 전개과정을 관망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이미 유입된 난민에 한정하여 구호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일부 유입된 북한난민이 당장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측이 북한난민을 통제하여 북한측으로 송환하는 등의 강경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측으로부터 유입되는 북한 난민의 수가

83) 블라디보스톡의 현지신문 *Vladivostok*, 1997. 5. 7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고, 북한 주민들이 기아를 모면하기 위해 마치 1860년대 초 연해변강으로 들어왔듯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국경봉쇄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폭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북한의 정세가 악화되어 난민의 수가 급증하면 유입통제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 러시아는 난민처리와 관련하여 강은 양면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러시아가 이들에 대해 관용정책을 취할 경우, 러시아는 연해변강 지역에 임시 수용소를 설치하고 구호활동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에 대해 남한과 일본·미국 등 관련국, 국제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난민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유엔고등판무관실과 협조하는 한편, 남한측과의 교섭을 진행할 것이다. 탈출난민과 북한내 난민가족간의 연락과정을 통해 북한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불만이 더욱 확산되면서, 이는 북한 체제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후 러시아는 난민처리문제를 지렛대로 새로이 등장할 북한정권 또는 남한과의 교섭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통일과정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까지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통제정책을 취할 경우, 러시아는 국경을 계속 봉쇄하면서 난민 유입을 계속 억제하고 이미 유입된 탈북난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임시수용소에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난민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게 될 것이며, 국경봉쇄 해제와 난민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고조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난민처리과정에서 북한 탈출난민들이 러시아내 定住를 희망하는 경우 러시아는 가능한 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극동지역의 한인 재정착문제를 영토·국경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러시아측 분위기를 감안할 때<sup>84)</sup> 러시아가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 탈출난민이 극동지역에 정주할

경우, 이들이 극동지역 한인사회로 흡수되어 한인공동체가 확대되고 이로 말미암아 점차 한인공동체가 정치적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85)</sup>

## 2. 급변사태 진정이후의 역할

정치권력의 변화양태를 중심으로 급변사태의 결과를 분류하면, 급변사태를 성공적으로 진압하여 기존 정권이 유지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하여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로 대별되는 데, 정권 교체의 경우 체제는 변하지 않고 정치지도자만 교체되는 결과와 지도자가 교체되면서 체제도 붕괴하는 결과로 나뉘어진다. 즉 정권유지(기존정권이 유지되면서 정책만 변화), 정권교체(사회주의체제하의 정권교체), 체제붕괴(사회주의체제 붕괴)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정권유지의 경우, 쿠데타 또는 민중봉기를 성공적으로 진압한 북한 정권의 정책선택은 주민포용 차원에서 유화적 개혁정책을 취하거나 주민탄압 차원에서 강경보수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정책을 취할 경우, 이는 한반도정세의 긴장완화와 남북대화로 반영되고, 통일과정을 전제로 논하면, 결과적으로 화해·협력단계를 거쳐 「사실상의 통일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일유형으로는 서론에서 논급한 유형Ⅱ(합의·평화·단계)와 유형Ⅳ(흡수·평화·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때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입장과 역할은 「IV장 점진적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에서 논한 바

84) 실제로 1997년 4월 25일 이타르.타스통신은 한국 당국이 러시아극동지역에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자치지역을 만든 뒤 러시아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85) 극동지역에의 한인 재정착문제는 강원식, 「한·러 안보협력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6-22 (1996. 12), pp. 156~163, 166~169 참조.

와 같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강경정책을 취할 경우,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우려하여 현상유지정책을 추구하게 되고, 북한 체제는 그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급변사태 재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한편 정권교체의 경우, 새로 집권한 사회주의적 개혁정권은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유형 I(합의·평화·조기)과 유형 III(흡수·평화·조기)의 조기통일을 추진하거나 유형 II(합의·평화·단계)와 유형 IV(흡수·평화·단계)의 단계통일을 모색할 것이다. 이 경우 주변국은 북한 신정권과의 관계정립에 우선목표를 두고 대북 유화정책을 추진할 것이나, 통일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경우, 직접 개입보다는 적극적인 통일지지 천명 등을 통해 통일과정에서의 역할을 맡으려 할 것이다.

특히 유형 I과 유형 III의 조기흡수통일의 경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급변사태 전개과정에서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모색하는 신정권의 수립을 북한의 기존정권과 함께 중국이 사전저지하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출발할 것이므로 중국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아 단계적 통일의 경우보다 조기통일의 경우, 러시아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조기통일은 우선 북한의 신정권이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희망하는 경우로 나타날 소지가 많고 따라서 사실상 외세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역내 입지가 매우 취약한 러시아로서는 당장 한반도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처럼 북한내부에서 통일열기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주변국들도 이에 대해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더욱이 독일처럼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만 조기 통일의 경우, 통일비용 조달 필요성으로 인하여 경제력을 가진 일본과 미국의 역할은 다른 경우보다 오히려 중요하게 부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체제붕괴의 경우는 첫째, 쿠데타와 민중봉기로 인해 내전이 발발하고 이로써 무정부상태가 장기화되거나 둘째, 쿠데타와 민중봉기 결과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민주주의체제가 수립되는 경우이다. 셋째,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첫째의 내전 발생의 경우, 국제적으로 북한 정세의 불안정성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한반도 통일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되거나 또는 주변국들이 PKO 파견을 통해 북한의 내전에 개입하고자 할 것인 데, 러시아는 앞서 언급한 내전과정에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국제적 해결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내전 당사자 쌍방에 대한 영향력을 공히 확보할 수 있다면 주변국중 최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의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경우, 남한과의 조기통일이 실현되는 데, 러시아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급변사태 진전과정에서 러시아가 어느 편을 지원하였느냐에 달려있으며,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그 후 남한과의 통일논의과정에서 러시아가 취할 행동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서 「점진적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논하였던 것도 대동소이할 것이나, 전자에 대해서는 상이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러시아가 급변사태 전개과정에서 판단 착오로 반체제쿠데타 또는 민중봉기 세력을 지원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러시아는 그 후의 통일과정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셋째의 무력도발의 경우,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의 편을 들어 북한

을 양면공격하지 않는 한 러시아의 역할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처음부터 무력도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 VI. 결론

한반도 통일이 실현될 경우 러시아가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서 논하였듯이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에 적극 관여하고 한반도 통일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이 실현될 경우, 러시아는 극동개발의 중요한 외적 환경인 한반도 정세의 안정, 러시아가 평화국가라는 국제적 이미지 고양, 통일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경제실리 획득, 한국과 중국간의 전통적 관계의 소원화, 중일의 패권화 견제, 미국의 영향력 견제, 역내 국제기구 가입 분위기 조성, 러시아의 강대국 재생 기회 조성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국 러시아는 이와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한반도 통일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관여하고자 할 것이다. 크게 나누어볼 때, 한반도 통일과정은 점진적·단계적 통일과정과 북한 급변사태로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현상황에서 러시아는 역내 역학관계의 열세로 인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이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과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발휘되고 신장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를 강조함으로써 미·중의 개입을 최소화하려 하는 동시에, 한반도문제의 다자주의적 접근을 주장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할 것이다. 즉 러시아는 현재 한반도문제에 대해 남북 대화와 다자주의를 통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 기조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와 같은 입장은 지속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대화가 진전되고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화해·협력단계를 거쳐 남북관계가 통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앞서 논하였듯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천명하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 실현을 위해 주변국을 설득하는 등 통일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외교노력을 경주하는 등 적극적인 통일지원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급변사태의 결과로서 조기 통일이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는 점진적 통일과정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역할도 급변사태 전개과정에서의 러시아의 대응 여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을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호기로 인식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반 정책조치를 강구·추진할 것이다. 그것은 급변사태의 각 상황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반정권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역할을 조기통일시와 점진적 통일시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조기통일시 보다 점진통일시에 그 역할이 더 클 수 있다. 왜냐하면 현상황에서 러시아의 역내 입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대해 러시아가 즉각적으로 관여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이며, 만일 점진적으로 러시아가 역내 입지를 확대해 나간다면 그 여지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와 점진적 통일시로 나누어 보면, 러시아의 역할은 점진적 통일시보다 급변발생시에 효과적으로 모색되고 발휘될 수 있다. 즉 돌파구 개념으로서 한반도문제라는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의 기본 인식 틀에서 볼 때,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은 바로 현상변경의 첫 번째 돌파구이며, 따라서 그 전개과정을 통해 러시아

가 필요로 하는 한반도내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의 현상변경을 통해 자국이 아태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애로국면을 모두 타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의 발생은 러시아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므로 너무 빨라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늦게 와도 곤란하다. 오히려 한반도의 정세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입지가 확보된다면 그와 같은 상황이 가능한 빨리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 급변사태 발생후 통일실현」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장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러시아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전개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화함으로써 한반도 통일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려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중재함으로써 조기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정책목표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물론 북한 급변사태 전개과정에서 러시아가 잘못 대응하여 영향력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통일과정에 러시아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강원식. 「통일한국의 등장에 따른 동북아 안보구조 변화 대응책」.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27. 1994. 12.
- 강원식. 「한·러 안보협력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6-22. 1996. 12.
-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6-23. 민족통일연구원, 1996. 12.
- 여인곤. 「러·북관계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5-01. 1995. 9.
- 여인곤.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추진방향」.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03. 1994. 9.
- Amnesty Internationa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Russian Federation: Pursuit, Intimidation and Abuse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Workers*.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1996.
- Buszynski, Leszek. *Russian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1996.
- Chung, Il Yung. ed., *Korea and Russia*. Seoul: The Sejong Institute, 1992.
- SIPRI Yearbook, 1992.
- Gorelyy, I. O. *Koreya: Kontseptsii ob"edineniya*. Moskva: Vostochnaya Literatura, 1997.

Tsentr Koreyskikh Issledovaniy, Institut Dal'nego Vostoka RAN.  
*Aktual'nye problemy Koreyskogo poluostrova*. Moskva: IDB  
RAN, 1996.

Tsentr Koreyskikh Issledovaniy, Institut Dal'nego Vostoka RAN.  
*Politicheskie, ekonomicheskie i kul'turnie aspekty ob'edineniya  
Korei. chast' I i II*. Moskva: IDB RAN, 1997.

## 2. 논문

강봉구.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1993. 3~1995. 6): 북한 핵문제의 해  
결과정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20권 제1호. 1996년 봄.

강원식.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러·일의 입장과 해결 전망." 「통일연구  
논총」. 제1권 제2호. 1992.

Denisov, Valery. "The Problem of Nuclear Nonproliferation in  
Korea."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August 1994.

Eberstadt, Nicholas. "Hastening Korean Reunification." *Foreign  
Affairs*. Vol. 76, No. 2. March/April 1997.

Kislov, Alexander. "Russia and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3, No. 4. Winter 1992.

Kortunov, Andrei V. "The Northeast Asia Policy of Russia in the  
21st Century."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Korea's Security Strategy*. cohos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June 9~10,  
1997. Seoul, Korea.

Macdonald, Donald S. "The Role of the Major Powers in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5, No. 3. Summer 1992.

Niksch, Larry A. "U. 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Collapse Theory and Its Influence." 한국 국방대학원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1996. 8. 22).

Soh, Yoke T. "Russian Policy toward the Two Koreas." in Peter Shearman. ed. *Russian Foreign Policy Since 1990*. Boulder: Westview Press, 1995.

Zagorsky, Alexei V. "The Roles of Major Powers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ward the 21st Century: Russian Perspective." presented to the 7th International Defense Conference. held by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on November 4~6, 1996, Seoul.

"North Korea Offers to Freeze Program." *News from the Carnegie Endowment*. June 16, 1994.

米軍備管理軍縮局. "世界の軍事費と武器輸出に関する報告書(要約下)." 「世界週報」. 1996年 10月 15日.

森本敏. "冷戦後におけるロシアのアジア・太平洋政策." 「國際問題」. 通卷 401號. 1993年 8月.

齊藤元秀. "ロシアの朝鮮半島政策の檢證." 「ロシア研究」. No. 24. 1997年 4月.

倉田秀也. "朝鮮問題多國間協議論とロシア-北朝鮮「核問題」と平和體制樹立問題." 「ロシア研究」. 第24號. 1997年 4月.

타타렌코, M. L. "극동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러·한관계: 러시아측 관점." 「중소연구」.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Arbatov, A. "Rossiya: natsional'naya bezopasnost' v 90-e gody."  
*Mirovaya ekonomika i mezhdunarodnye otnosheniya (MEMO)*.  
No. 8~9. 1996.

Vorontsov, Aleksandr V. "Koreyskaya politika RF v pervoy  
polovine i seredine 90-kh gg." Tsentri Koreyskikh  
Issledovaniy, Institut Dal'nego Vostoka RAN. *Politicheskie,  
ekonomicheskie i kul'turnie aspekty ob"edineniya Korei. chast'  
II*. Moskva: IDB RAN, 1997.

"Kontsepsiya vneshney politiki RF." *Diplomaticheskiy vestnik*,  
spetsial'nyy vypusk. 1993. 1.

"Rossiya i situatsiya vokrug Koreyskogo poluostrova."  
*Diplomaticheskiy vestnik*. No. 7~8. 1994. 4.

### 3. 기타

「내외통신」.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Jane's Defence Weekly*.

*Los Angeles Times*.

*Washington Post*.

*Diplomaticheskiy vestnik*.

Ekspert.

Izvestiya.

*Komsomol'skaya pravda.*

*Krasnaya zvezda.*

*Moskovskie novosti.*

*Nezavisimaya gazeta.*

*Novoe vremya.*

*Pravda.*

*Rossiyskaya gazeta.*

*Vladivostok.*

「RP北朝鮮政策動向」.

「讀賣新聞」.

「朝日新聞」.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의共著 申相振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0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계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5,7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b>■ 북한인권백서</b>			
북한인권백서 1996	육태환 전현준의 계성호	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6	육태환 전현준의 계성호	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b>■ 연례정세보고서</b>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4,5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5,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5,5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4,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일반회원은 10만원, 학생회원은 7만원, 기관회원은 15만원임.  
일반회원은 10만원, 학생회원은 7만원, 기관회원은 15만원임.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586, 901-2613, FAX:901-2547)

